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 및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포럼운영

2021. 06. 16.



연구기관: IUCN한국위원회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 및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포럼운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

연 구 진

책임연구원 황 은 주 (IUCN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공동연구원 전 재 경 (IUCN한국위원회 이사)

이 희 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연구보조원 진 혜 연 (자연환경국민신탁)

포럼위원

김민선 과장 (국립공원공단·IUCN아시아 파견)

김옥현 이사 (대자연)

문경오 사무국장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박영철 부회장 (한국습지학회)

윤종수 회장 (IUCN한국위원회·前환경부차관)

진은숙 팀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생태학회)

허경자 이사장 (국제녹색섬포럼)

자문위원

심숙경 부위원장 (UNESCO MAB한국위원회)

유범식 과장 (환경부·IUCN본부 파견)

이우신 회장 (환경보전협회·IUCN한국위원회 감사)

이용철 교수 (한국농수산대학·前일본국립佐賀大學)

최중기 명예교수 (인하대학교·해양학)

차 례

연구사업 계획안	9
1. 개 요	9
2. 추진배경	9
3. 사업내용	9
4. 사업예산	11
제1장 총 설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범위	14
제4절 연구방법	15
제2장 IUCN의 위상 및 여건	16
제1절 IUCN	16
제2절 세계자연보전총회	19
제3절 IUCN한국위원회	20
제4절 주요국가 위원회들의 활동	26
제3장 포럼 논의 결과 및 실행경로	30
제1절 참가자들의 의견 요지	30
제2절 IUCN한국위원회의 전략적 역할	31
제3절 실행경로	32
제4장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증진 방안	37
제1A절 규정 및 정관	37
제1B절 조직의 기능과 전략적 목표	38
제2절 전문성 제고	39
제3절 연대와 확장	40

제4절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41
제5절 추진계획: 단기·중기·장기·수요공급연계 및 조직	42
제5장 국제동향의 반영과 개발도상국가 역량강화 지원	46
제1절 IUCN한국위원회의 목적과 비전의 정립	46
제2절 조직의 성장과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 구체화	47
제3절 국제동향의 반영	48
제4절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지원	72
제6장 남북 환경협력 이바지: DMZ를 기반으로	79
제1절 남북의 법률관계	79
제2절 자연유보지역	82
제3절 DMZ의 미래전망	84
제4절 남북환경협력 제안	89
제7장 맺 음 말	96
제1절 조직 및 기능 활성화	96
제2절 국제화	96
제3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	97
참고문헌	100
부록: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포럼 회의록	103
제1절 제1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06
제2절 제2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96
제3절 제3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15
제4절 제4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23

연구사업 계획안

1. 개 요

- 1) 명칭: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 및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포럼운영
- 2) 기간: 2020년 12월 17일~ 2021년 6월 16일
- 3) 예산액: 일금이천만원(W20,000,000)
- 4) 수행기관: IUCN한국위원회

2. 추진배경

1)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https://www.iucn.org>)은 UNESCO, UNEP, CBD 또는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하여 적색목록(red list) 등 보호구역 관리체계, 세계유산(WH) 지정 및 관리체계, 각국의 자연보전 방안 또는 환경·생태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이바지하는 국제민간기구로 활동을 수행

2) 한국의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제주도청, 국립공원공단 및 NPO·NGO·학회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가하는 IUCN은 1,400여 회원기구가 가입해 있고 17,000명의 전문가집단의 지원을 받아 160여개 국에서 활동하는 한편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WCC)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음

3) 1997년에 설립되어 20개의 국내 회원기관들이 참여하는 IUCN한국위원회는 환경부 등록 사단법인으로서 그동안 세계총회 지원, 참가와 연구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4) IUCN한국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미세먼지 또는 코로나 19 등 최근의 국내외 환경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외교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당면함

5) 이에 IUCN한국위원회는 2016.1.1. UN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 Transforming Our World”에 따라 UN 산하 전문기관들과 IUCN이 수정한 기본전략 등의 변화를 반영한 “국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 필요가 제기됨

3. 사업내용

- 1) 국내외 환경동향 및 여건 분석
 -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개와 영향
 - (2) 코로나 19에 대응한 생태문명론의 부각
 - (3) 국내 환경정책과 규범의 전개와 영향

- 2) IUCN 등 국제환경기구들의 전략변화 분석
 - (1) UN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의 영향
 - (2) 국제전문기구 및 IUCN의 전략변화
 - (3) 주요국가들의 대응
- 3) IUCN 한국위원회 회원기관들의 협치(거버넌스) 증진
 - (1) 환경협치(거버넌스)의 필요성과 현황
 - (2) IUCN 규범 및 정책의 적용
 - (3) 변화 및 동인 분석과 대응방안
- 4) 국내외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안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ecosystem services)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범주
 - 주요국가들의 사례와 시사점
 - 법률체계(Legal Frameworks)의 구성
 - 생태관광과의 연계
 -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정부·민간 협치(거버넌스) 방안
 - 재산권 법리의 적용
 - 지불제 계약 요령
 - 관리기구 및 IUCN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2) 개발도상국가 역량강화 지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협력을 위한 IUCN한국위원회 역할
 - (3) 남북환경협력 이바지
 - DMZ의 미래전망
 - 남북환경협력 제안

관련 법률정보 및 참고문헌

- 생물다양성법
 - 제2조제10호: 생태계서비스
 - 제16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 해양생태계법
 -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한강수계법
 -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자연환경보전법
 - 제2조제18호: 생태관광

-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생태관광지역
-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 해양생태계법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갯벌법

제2조제6호: 갯벌생태관광

제5장 갯벌생태관광(제26조부터 제30조)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September 2015)
 - Thomas Greiber,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IUC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 78)
 - Amanda Briney, An Introduction to Ecotourism (2020)
 - Dimitrios Diamantis(2010), The Concept of Ecotourism: Evolution and Trends, Current Issues in Tourism 2(2)
 - 자연환경국민신탁, 『생태관광진흥법(가칭) 제정 방안연구』(환경부: 2020.12.7.)
 - 황은주,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이익공유 법리연구』(서강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년)

4. 사업예산

※	내 용	단 가	금 액
인건비	책임연구원	3,216,863원×3개월×0.5	4,825,000원
	공동연구원(A)	2,466,647원×3개월×0.6	4,439,900원
	공동연구원(B)	2,466,647원×3개월×0.6	4,439,900원
	연구보조원	1,648,871원×3개월×0.7	3,462,600원
		소계	17,167,400원
경상비	자문료	150,000원×4인×2회	1,200,000원
	회의비	20,000원×5인×6회	600,000원
	시내여비	10,000원×4인×5회	200,000원
	일반관리비	5% 이하	832,600원
		소계	2,832,600원
합 계			20,000,000원

제1장 총 설

제1절 연구배경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라고 한다) 한국위원회(이하 ‘IUCN한국위원회’ 또는 ‘한국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부문에서 UNESCO한국위원회, UNESCO인간과생물권(MAB)한국위원회와 같이, 많지 아니한 국제환경기구들 또는 전문기구들의 국내 공식 조직으로서, IUCN 본부의 목적과 사명의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업을 통하여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책무를 진다.

2012년의 세계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UN은 새천년발전목표(MDG)를 승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를 2016.1.1.부터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UN 산하 UNESCO, UNFCCC, UNEP, UNDP, UNCCD, FAO 등 각 전문기구들은 그들의 기본전략을 모두 이에 맞추어 수정·개편하였다. 2015년 12월 12일에 폐막된 UNFCCC에서 채택되고 2016년 11월 4일부터 발효된 파리협약(Paris Agreement ; Accord de Paris)은 교토의정서를 승계하면서 각국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에 지각변동을 야기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IUCN도 종래 협력관계에 있는 UNESCO와 UNEP 등 전문기구들의 동향에 부응하여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²⁾에 바탕을 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전략들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변화는 IUCN한국위원회의 전망과 목표 그리고 사명에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다. IUCN한국위원회는 2012년의 WCC를 전후하여 각종 결의안(Motion)의 발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주선하거나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³⁾을 펼쳤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1)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수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말한다. 상세는 <https://sdgs.un.org/goals>, 참조

2) 예컨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US), Climate Change, Future Conditions, and Nature-based Solutions: Webinar (July 28, 2021) ; Camilla Ghisleni (translated by Tarsila Duduch), 6 Urban Design Projects With Nature-Based Solutions: <https://www.archdaily.com> (July 06, 2021) ; 장인영·박은진·강성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의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Issue Report 21-01호(국립생태원 2021-04-19) ; 김이형, “자연기반해법(NBS)의 원칙 및 적용사례”, 『물과 미래』 제53권제3호 (한국수자원학회, 2020.4.13.), pp.8~20 ; 우효섭·한승완, “물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과 유사개념들의 유형분류 및 체계”, 『한국응용생태공학회지』 제7권제1호, 2020.03. pp.15.~25

3) 예컨대, National Nature Trust, *Skills and Experiences of Cooperation through*

다소 활력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2절 연구목적

국제환경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환경기구들과 EU위원회 등의 정책 및 규범의 변화는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⁴⁾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IUCN한국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에서의 국제동향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또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당위성에 당면하였다.

이 연구는 IUCN의 목적과 사명에 부응하는 한국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분석, 검토(review) 및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고, 한국위원회 회원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포럼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한국위원회의 전략적 역할(niche)을 성찰하고 한국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로와 과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위원회를 활성화시켜 IUCN 본연의 활동에 적극 이바지함을 제1차적 목표로 삼지만, 조직 자체의 활성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및 한국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 역량강화, 정보와 지식의 축적 및 정책수요의 개발과 지원에 이바지함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3절 연구범위

1. 공공재정 확충 방안

- 정부예산 지원
-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지식공유프로그램(KSP)⁵⁾ 등과의 협업

2. 협치증진 방안

- 참여 기관·단체간 협치(governance)
- CSR 기반 ESG 기업들의 후원

3. 협력·지원 프로그램 발굴

National Trust, TEXT BOOK: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2012 of the IUCN, Jeju, Korea

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에도 세금이 있다?…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22.). <https://www.korea.kr>

5)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말한다.

- 개발도상국(아세아·아프리카) 대상
- 남북환경협력

4. IUCN 본부와의 소통

- IUCN 브랜드를 활용한 프로그램 참가 및 개발
- 부문별 전문가 활용

제4절 연구방법

1. 비교연구

- 1) UNESCO, UNEP, CBD, FAO, 또는 P4G⁶⁾ 등의 활동 및 특징 분석
- 2) 선도국들의 IUCN국가위원회들의 활동 분석
- 3) 국내 소재 국제환경기구들의 자연보전활동 분석

2. 검증

- 1) IUCN본부 활동의 경험과 성과 및 전망을 고찰
- 2) 한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국립공원공단) 등의 對 IUCN 활동 고찰

3. 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 포럼
 - 회원기관·단체 의견수렴 연석회의
 - 회원기관·단체간 결과 공유
- 2)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 전문가 평가 병행

4. 해법 도출

- 1) 중장기과제 및 해법
- 2) 단기과제 및 해법

6) P4G는 「녹색성장과 지구목표 2030 파트너십」(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어이다. <https://p4gpartnerships.org/abou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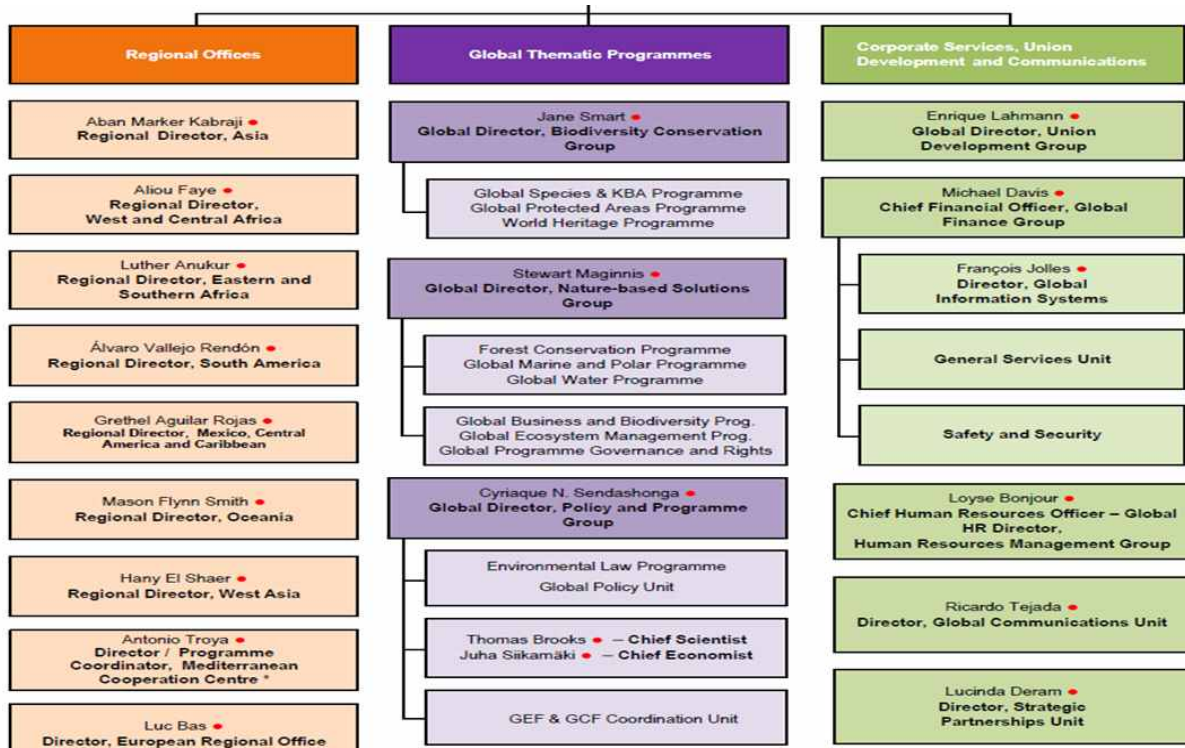
제2장 IUCN의 위상 및 여건

제1절 IUCN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제사회에서 자연환경분야를 대표하는 환경 단체로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오랜 역사와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부터 4년마다 ‘IUCN 회원 총회’를 열었다. 1996년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부터 ‘세계자연보전총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총회를 일반에게도 개방하여 자연보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 IUCN의 사명 및 규모⁷⁾

- 설립: 1948.10.5. 프랑스(Fontainebleau市)에서 설립
- 비전: 자연을 가치화하고 보전하는 공정한 세상(just world)
- 사명: 각 사회가 자연의 통합성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촉진·지원하고, 자연자원을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자연을 보전하도록 후원
- 1,400 회원기관 및 17,000명의 전문가 참여



7) <https://www.iucn.org/about>

2. IUCN의 성격

- 1) IUCN은 UN전문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아닌 각국 정부·NGO 혼성기구
 - IUCN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각국 정부기관, NPO, NGO, 학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혼성기구
 - IUCN의 6개 위원회들은 각국의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기관들은 IUCN에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
 - 각국의 NPO, NGO, 학회 등은 각자 연회비를 IUCN 본부에 납입하는 재정구조를 취함
 - 각국의 회원기관·기구들은 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를 구성
- 2) IUCN은 종래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
 - UNESCO 또는 UNEP 등의 전문 파트너 기구로서 협력사업
 - 회원국가들을 순회하면서 4년 단위 WCC를 개최
 - 회원기관들의 수요에 응하여 정책 및 기술 자문 실시

3. 규범력과 협치

- 1) UN기구 또는 국제기구들처럼 조약·협약에 기반한 규범력 미비
- 2) 회원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유연성 확보

4. 독자성

- 1) 국제협약 등 강행규범이 아닌 자발적 협약에 따른 구속력
- 2) UNESCO, UNEP, UNDP, CBD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 3) 신뢰와 협동에 기반한 협치(governance)에 주력

5. 고유 브랜드

- 1) 국제기구들은 최근 각자의 고유한 브랜드를 확대하면서 활동을 전개
- 2) IUCN은 국제기로서 UNESCO의 세계유산(WH)·생물권보전지역(BR) 또는 FAO의 세계농어업유산 등에 기술자문을 실시

6. 재정운용

-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재정을 충당
- 각국 정부 또는 참여 기관들의 임의적 기부나 회비에 의존
- 지정기탁 방식에 따라 기부금 운용

회비 (Membership dues) 범주

Category A: States, government agencies, and political and/or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s

Category A: States

Category A: Government agencie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ategory A: Political and/or economic integration organisations

Categories B and C: 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indigenous peoples' organisations

Category D: Affiliates

*source: Congress Document CGR-2020-7.3/1-Revised Annex 1

7. IUCN의 활동⁸⁾

IUCN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지구환경,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지구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하고⁹⁾ 60여 개국에서 지역, 국가, 프로젝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¹⁰⁾ 환경평가와 관련하여서는 IUCN에서 UNEP-WCMC(UN환경계획-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에 제공하는 세계보호지역 현황자료가 OECD의 환경성과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ESI) 및 환경성과평가(EPI) 등 국가별 자연환경평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주요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¹¹⁾ 발표(1964년)
- 국제협약들의 창설에 기여:
 - 람사르습지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1971)
 -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1974)

8) <https://www.iucn.org/about/iucn-a-brief-history>

9)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세계경제포럼(WEF)·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글로벌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GeSI)·싱가포르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추진한 ‘모두가 함께하는 기술 및 지속가능성’ 포럼 사례는 량화 화웨이 회장 “5년간 1억5천만 달러 투자...300만 ICT 인재양성”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080305> (2021.7.8.)

10)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사례로서는 해양환경공단, IUCN 국제협력 업무협약서 체결: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강화 사업 추진 컨슈머타임스 2021년 07월 22일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590>:

11) 적색목록의 등급은 멸종 우려 정도에 따라 9단계로 나뉜다. 그 중 야생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심각한 위기종(예:삼악어)’, 야생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멸종위기종(예: 판다)’, 야생에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예:북극곰)’의 3가지 등급이 가장 보호가 필요하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간행(1980)
 - UNEP 및 WWF 협력사업
 - UN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및 의제 정리에 이바지
- 『지구돌봄』(Caring for the Earth) 간행(1992)
 - 지구정상회의(1992 Earth Summit) 대비
 - CBD, UNFCCC 및 UNCCD 출범에 이바지
- UN총회에서 공식 옵저버(official observer) 지위를 취득(1999년)
- 광산·석유·가스 등 사업 부문에서 사업수행전략을 개발(2000년대 초반)
- 식량·물·기후변화·빈곤저감에 대한 자연기반해법(NBS) 선구(2000년대 후반)
 - 세계자연유산 심사와 평가에 기여(UNESCO 협력사업)
 - 보호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제도화

제2절 세계자연보전총회

1. 세계자연보전총회

-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는 세계자연보전 연맹(IUCN)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녹색경제, 식량안보증진을 위한 생태계 관리, 자연혜택의 공정한 분배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분야 최대규모 국제회의이다.
-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지구의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위하여 정부, NGO, 전문가들이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구촌 환경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와 NGO를 망라하여 지구촌 환경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IUCN 회원과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참가자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이다.

2.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¹²⁾

1) 공식명칭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2012 WCC)

12) 이 절에 수록된 내용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Press Kit(2012.7.)를 발췌·요약

2) 기간 및 장소

- 기간: 2012년 9월 6일(목) ~ 9월 15일(토) (10일간)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일원 (ICC Jeju)

3) 참가자 규모

- 등록참가자: IUCN회원, 환경전문가, NGO 등 180여 개국의 환경 리더
- 일반참가자: 일반국민,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 온라인 참가등록 사이트: <http://events.iucn.org/wcc2012>
- 한국어 안내: <http://www.wcc2012.or.kr/conservation/forum.asp>

4) 주최 및 주관 기관

- 주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주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5) 총회 주제

- 주제: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¹³⁾

6) 총회 프로그램

- ① 개회식 (Opening Ceremony)
- ② 세계보전포럼 (World Conservation Forum)
- ③ 회원총회 (Members' Assembly)
- ④ 세계리더스대화 (World Leaders' Dialogues)
- ⑤ 답사 (Excursions)
- ⑥ 폐회식 (Closing Ceremony)

7) 총회 결과물

- ① 제주선언문: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복지, 녹색성장 등 21세기형 자연보전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
- ② 결의문(Resolutions): 발의안 중 회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IUCN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에게 해당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
- ③ 권고문(Recommendations): IUCN 구성원 이외의 제3자(the third party)에게 조치를 요구

제3절 IUCN한국위원회

1. 관련 국제규범

IUCN은 Statue Part VII에서 국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기본

13) 자연의 회복력은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적으로 (1) IUCN 사업과 조직 거버넌스에 회원의 참여, 협력, 조정을 촉진, 그리고 (2) IUCN 사무국, 전문위원회, 국가 및 지역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업 발굴, 조정, 이행하는 것을 국가위원회의 기본역할로 명시한다.

IUCN 헌장(Sta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CN 사업과 거버넌스에 회원의 참여, 협력, 조정을 촉진함 ■ IUCN 사무국, 전문위원회, 국가 및 지역 위원회와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 조정, 이행함
규정 및 운영지침(Regulation & Operation Guidel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세계보전총회(WCC)에서 국가 및 지역위원회가 본인의 국가 및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모금 및 캠페인 활동에 IUCN 사무국 외 실체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p>“One Programme Charter”[헌장, 2011년도 결의]: IUCN 사무국, 위원회, 회원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사업/활동을 요구함(예: 사무국이 이행하는 사업에 회원단체 참여)</p>

2. 각 국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IUCN의 제안과 기대효과

1)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제안

IUCN	회원단체
<p>회원단체의 대외적 (IUCN 사업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촉진</p> <p>① 사업운영(program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및 사무소(본부, 지역 및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에 협력과 참여 ■ 6개 전문위원회: 과학 및 기술적인 전문성 기여 <p>② 협치동맹(govern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의제 설정 및 선별, 의사결정에 참여) ■ 지역위원회(회의 참여) ■ 다른 국가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p>회원단체들의 (국내/국외) 협력 유도 및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안(advocacy) ■ 과학, 연구 ■ 대중적인 캠페인 (웹사이트 운영, 이벤트 개최 등) ■ 역량강화 워크숍 ■ 정보 교환 ■ 공동 사업 및 활동 ■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영향력 발휘

2) 기대효과

IUCN	회원단체
국외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단체: 국제적인 사업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생물다양성/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방향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 ■ IUCN 및 국외 회원단체: 자국의 고유 특성 및 조건속에서 생물다양성/자연보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에 대해 이해 넓혀 다른 지역에 적용 ■ 자국의 환경보전 전문가/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부터 지원받음 	국내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단체: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확대하고,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으로 영향력 강화 ■ 환경부: [올림픽 효과] 국제사회에서 선두적인 활동으로 주목받아 국내적으로 생물다양성/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위상 제고.(정부정책 중 & 대중적 관심) ■ 외교부: 해외 ODA사업 및 기업 진출에 한국의 “생물다양성/자연보전”에 대한 전문성을 수반하여 대외적인 신뢰성 제고 및 사업/협력입지 확장

3. IUCN 한국위원회의 목표 및 사업

1) 목 표

한국위원회 정관은 위원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 사단법인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는 국내 자연환경보전 활동 이외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향하는 자연의 통합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자원의 적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범지구적 자연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며 회원들 간의 교류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목표로 한다.

2) 사 업

한국위원회 정관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규정한다(제4조): (1) IUCN과의 협력사업 및 IUCN 관련 사업; (2) IUCN이 지향하는 이념을 국내에 홍보하며 그 목표를 지원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3)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IUCN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사업; (4) 자연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를 주창하고 대중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약

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 (5) 자연환경에 대한 세계관을 넓히고 범지구적 자연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협력 개선에 기여 하는 사업; (6) 국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및 전문가그룹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외 자연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7) 위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4. IUCN 한국위원회의 WCC 활동


IUCN한국위원회는 제주에서 개최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환경부를 비롯한 회원기관·단체들로 하여금 한국 특성이 반영된 23개 주제를 발의안으로 제출하도록 지원하여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도모하였다.

IUCN한국위원회 회원 기관·단체들이 2012 총회에 제출한 발의안 목록

- (1) DMZ 보전 전략 (국립공원관리공단)
 - : 국가 차원의 DMZ 관리 기본방향을 주도하여 설정
 - : 북한과의 평화정착 도모
- (2)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한국환경생태학회)
 - : 백두대간-시호테알린(러시아)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 유도
 - : 단절된 생태축 복원 계기
- (3) 저어새 서식지 보전 (한국생태학회)
 - : 한국의 저어새 서식지와 한국정부의 보전노력 홍보
- (4) 갯벌의 보전 (한국습지학회)
 - :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홍보
 - : IUCN 갯벌보전 프로그램 주도
- (5)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한국환경생태학회)
 - : 관측네트워크(AP-BON)구축 및 운영
 - : AP-BON 구축에 관한 한국의 역할 증대
- (6) 동북아시아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한국환경생태학회)
 - :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주도적 구축
- (7) 철새동시센서스를 위한 국제협력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 : 국제 NGO 및 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철새 관련 연구와 보전에 관한 정부참여 확대
- (8)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공유재산(commmons)의 보전 및 이용방안 (자연환경국민신탁)
 - : 우리나라 국민신탁제도 홍보





- : 국민신탁(National Trust)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유재산 증대
- (9) 남남협력을 통한 생물다양성보전 (자연보호학회)
 - : 생물자원 부국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국가이익 도모
- (10) 섬-연안지역 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 (한국생태학회)
 - : 생물문화다양성 IUCN 실행계획 촉구 및 참여
 - : 우리나라 섬-연안지역 생물문화다양성 소개
- (11)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협력 (환경부)
 - :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유도를 통한 피해 저감
- (12)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 예방 및 대응 (한국환경법학회)
 - : 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침 마련 시 주도적 참여
- (13) 지역해(황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한국해양학회)
 - : 황해 보전 협력모델 제시 등 공동사업 주도
- (14) 동아시아 수산관리 국제기구 구성 (한국해양학회)
 - : 수산자원 국제기구 설립 촉구
- (15) 녹색성장과 ‘자연+’ 세계 전략 (환경부)
 - : 녹색성장을 글로벌 아젠다로 제시
 - : 우리나라를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인식
- (16) 미래형 생태도시 조성 촉구 (한국환경생태학회)
 - : 생태도시 평가지표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 주도적 참여
- (17) 동북아 사무소 설치 (환경부)
 - : IUCN 동북아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 (18) 세계환경수도 모델도시 조성 및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
 - : 제주도를 친환경 도시모델 조성 및 확산
- (19) 제주지역 곶자왈의 역할과 보전방안 (제주도)
 - : 제주지역 특징적 지역인 곶자왈의 보전
- (20) 제주지역 하논 분화구 복원 보전 및 활용 (제주도)
 - : 제주 습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논 분화구 보전
- (21) 제주해녀 생업의 지속 보전 (제주도)
 - : 해녀의 생활·문화적 가치 보전
- (22) UNESCO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주도)
 - :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 (23) 식물보호를 위한 세계전략(GSPC)이행 확대 (산림청)
 - : 식물보호를 위한 전략적 이행·확대

자연환경국민신탁의 보전캠퍼스 이벤트 보도@WCC 2012, 제주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6-15 September 2012, Jeju, Korea



HomeAboutForumMembers' AssemblyNews & PressDiscover KoreaParticipantsEvent organizersTwitter Hub

News & Press

Latest News

Interviews and stories

Blog

Videos

All Videos

Daily wrap up

Interviews

News report

Live video

Photos

Social media

Social media at Congress

Twitter hub

Press

Press at Congress

News releases

Daily media brief

Media registration

Fact sheet

Media events

Audio for press

Images for press




Video for press

Media contacts

Keynote speeches


Newsletter

Home » News & Press » Interviews and stories



...And it's a wrap! Conservation Campus complete

13 September 2012 | Article



Conservation Campus
Photo: IUCN

On Tuesday, the Conservation Campus closed its doors for the last time after five days of outstanding events that provided in-depth training focused on the IUCN Programme.

Between 7 and 11 September, 45 sessions were run in the beautiful surroundings of the Lotte Hotel with more than 1,000 participants and trainers. As the days passed, many people were repeat customers, easily spotted with two, three, four or even a full complement of the brightly coloured Conservation Campus stickers on their name badge.

The sessions ran for four and eight hours each day and provided participants with hands-on training in subjects as diverse as ecopsychology, environmental law and engaging businesses for conservation.

"We couldn't be happier with how the Conservation Campus went," said **Rod Abson, Manager of the Conservation Campus**.

"Every participant seemed to really benefit from it and we received a lot of direct feedback from them as they filed out of the rooms at the end of the day. Time and again, we were told what a great standard the training was, and many were still deep in discussion as they left the Conservation Campus!"

The focus for the Conservation Campus team now is to broaden the benefit of these training sessions by turning some of them into e-learning courses.



제4절 주요국가 위원회들의 활동

1. 분석관점

- 1)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전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 등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마련 (회원 및 비회원 참여)
- 2) 정책개선 및 창안(advocacy):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닌 협력체로서 기여
- 3) IUCN 지역위원회 포럼/회의 등에서 회원단체 활동, 업적, 간행물 홍보
- 4) IUCN 사무국 및 사무소의 업무 보조, 협력, 촉진
- 5) 각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각종 국제협력 사업에 자문 제공

2. IUCN 프랑스위원회

LES 7 PROGRAMMES DU COMITÉ FRANÇAIS DE L'IUCN

Le Comité français de l'IUCN mène des actions pour répondre aux enjeux de la préservation de la biodiversité en France et dans le monde.

*"Un monde juste qui
valorise et conserve la
Nature"*



POLITIQUES DE LA
BIODIVERSITÉ



AIRES PROTÉGÉES



ESPÈCES



ECOSYSTÈMES



ÉDUCATION ET
COMMUNICATION



OUTRE-MER



COOPÉRATION
INTERNATIONALE

- 1) 국가 적색수종 및 적색 생태계 목록 관리
- 2) 교육 및 캠페인 활동 개발 및 실행
- 3) 개발도상국의 NGO활동 자금지원: 정부/기업 기금 이행역할을 위탁받아 보전사업 실행 및 관리
 - PPI(FFEM 공공펀드): NGOs apply for the fund and IUCN-Fr members participate in selection committee. (2006~2021, €7.8 million = 100억원) €50,000/proj
 - MAVA 재단: €30,000/proj. <15 months
-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UCN WCPA에 보고. 지역위원회와 협력
- 5) 정부 부처, 기관, 지자체 정부, 기업 등과 협력
- 6) 세부 '분과위원회' 구성
- 7) 프랑스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IUCN을 지원: 2005년 특수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4백억 원을 기부: IUCN사무국, IUCN 프랑스국가위원회, 전문인력 파견/지원

3. IUCN영국위원회¹⁴⁾

- 1) IUCN영국위원회는 영국, 유럽 및 범지구적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설정
 - 유사기관과 동맹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 형성/유지
 -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
 - 특정 정책 분야에 경험적 자문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및 기회 제공
- 2) 4년+ 동안 “강 복원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영국 곳곳에서 실시
 - 본 프로그램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활동
 - 강(江) 복원에 관련된 실무를 위한 워크숍 운영
 - IUCN영국위원회는 본 프로젝트 홍보에 주력
- 3) 12년+ 동안 “이탄지대(peatland)프로그램” 실시
 - 이탄지대 보전을 위한 협력관계와 과학적 기반을 축적
 - 정책적 자문과 효율적인 실무관리를 위해 활동
- 4) 이탄지대 프로그램 (IUCN UK PP)¹⁵⁾
 - 이탄지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설립에 기여(국가 단위, 유럽연합 단위)
 - 창안(advocacy)/캠페인: 의사결정권자와 대중에게 이탄지대의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알림
 - 기술적 지표개발(Peatland Code): 이탄지대 보전을 통하여 기후변화 완화(탄소배출 감축)에 대하여 자발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지표 개발
 - 이탄지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Good Practice”를 개발하여 이탄지대 지역주민에게 유포
 - 특정한 회원(Scottish & Yorkshire Wildlife Trusts)이 주최하는 형식
 - 특정한 신탁과 재단(Peter De Haan Charitable Trust, Esmee Fairbairn Foundation and John Ellerman Foundation)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

4. IUCN네덜란드위원회

- 1) 국제협력
 -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30여 개 국가에서 현지 활동단체들과 협력

14) <https://iucnuk.wordpress.com>

15) <https://www.iucn-uk-peatlandprogramme.org>

2) 재정운용

- 재단으로 등록되어 **Dutch** 로또, 정부, 유럽연합으로 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



Advocacy

We are policy advisers.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help put in place effective and equitable governance, in both government and business.



Research

We are experts. Knowledge is the foundation of our work, providing the latest science and objective recommendations.



Dialogue

We are bridge builders. Our ability to convene diverse stakeholders helps to forge and implement solutions to environmental challenges.



Field projects

We are project managers. With our large and diverse portfolio of conservation projects around the world, we deliver results on the ground.

5.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국내/해외 사업에 전문성 실천

- 해외 원조사업에의 자연환경보전 영역 확장
: KOICA 네트워크를 활용, 개발도상국의 자연환경보전 활동과 사업에 전문성 제공 (회원단체 참여, 협력)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해외 사업 구축
: KOICA(공적개발원조) / 수출입은행과 “국제자연환경보전기금” 조성
- 회원단체들이 IUCN한국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금 운영
*프랑스 PPI 모델: 기금사용 제안서 검토, 사업설계/이행/개선 등에 전문성 제공

2) 국내 중-장기 사업과 활동 가동

- 단체로 목소리를 함께 내며 영향력을 높임
: 캠페인, 특정 이슈에 대한 단체 성명 등
- IUCN한국위원회 회원단체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개발 및 구체적 실행
- 기업, 정부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특징에 따라 회원단체 역할 수행
* 예(영국모델): 습지살리기 / 하천살리기 등 특정 생태계를 중심으로

3) 국내외 올림픽 효과

: 국제적 활약을 토대로 국내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보전에의 ‘올림픽 효과’ 지향

(1)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위상 높이기

-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살려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입지 마련
- 저개발국가에 사례 지원
 - : 정부 정책의 변화, 개발과 산업의 이해관계, 민간단체의 진화, 국민적 이해와 참여 등

- 분쟁지역 등 보전의 사각지대 지원 및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활동

(2)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위상 높이기

-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내 관심 높이기
- ‘한국판 그린뉴딜’ 등 국가 주요 정책에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와 과제를 부각

4) 국내외 지렛대 효과

국내 자연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IUCN 국제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삼아 효과 극대화

- 남북 접경지역 보전활동(Trans-Boundary Conservation)
 - : 한국이 IUCN, CBD, 및 UNESCO 기반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
(예: IUCN WCC 2012, World Leaders Conservation Dialogue 2012, World Leaders Forum 2015 & 2018; CBD 2014 COP12; UNESCO MAB-DMZ 등재신청 2012)
- IUCN 6개 위원회(Commissions) 중 보호지역위원회(WCPA)와 협력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정책/방향/사례 제공

제3장 포럼 논의 결과 및 실행경로

제1절 참가자들의 의견 요지

1. 논의 범주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 포럼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중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1)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기능 활용 (2) 회원기관 통합 소통의 장 / 논의, 동향, 지적 교류의 교두보 역할 (3) IUCN 6개 전문위원회 관련 국내 전문가 발굴/지원 (4) IUCN 본부와 소통, 협력 (5) 국내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역할 (6) 한국위원회 조직 확대 및 체계 확립: 운영, 홍보, 학술, 청년, 국제협력 등 (7) 일반시민 대상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 전개 (8) 선택·집중 / 체계, 전략, 세부 목표 등을 우선 정립 (9)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기후변화, 생물보전 해결책 찾는 역할 (10) 홍보기반 구축이다.

2. 위원회 목적과 기능

포럼을 통하여 제안된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IUCN 한국위원회는 국내외 자연환경보전 및 증진을 위한 열린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갖춘 구심점이 된다.

2) 기 능

기능은 두 갈래로 정리하되, 각각 세분화한다.

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전문성 제고

■ 지식교류

수요와 공급 연계 지원 활동, 시범공동연구, 학술교류행사,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 그리고 타 IUCN국가위원회와 교류하는 역할로 구체화

■ 사업실천

② 연대와 확장

현 회원 외 잠재적 회원을 상대로 조사: 참여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이해 넓히기가 필요

■ 대중적 홍보 (청년포럼을 기반으로)

청년기반이 이미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음.

기존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청년 대상 사업과 연계지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전문/비전문 분야 확장
- 3) 위원회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안
 - ① 기획 운영
 -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계획 구체화
 - ② 인력 및 기반 마련
 - 웹사이트 등 소통 기반 마련
 - ③ 기초재정 지원 유치

제2절 한국위원회의 전략적 역할

한국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추후 중장기 활성화 단계에서 정책제안과 맞물려 추가적으로 (1) 사업가동과 (2) 대중적 홍보에 활력을 더한다. 물론 정책제안을 하는 동시에 점차 지역기반의 시범사업과 같은 사업 활동이 가동되겠고 대중적인 홍보 행사가 병행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정책제안에 초점을 두어 조직과 주요 협력관계 등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다져 나간다.

1. 정책제안 선도

IUCN을 비롯하여 국제적 동향과 최신 연구지식에 관여(모니터링, 형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 정책, 제도를 선별하여 (1) 전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2) 도입/실행(정책 입안)하는데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섭외, 교육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배경 및 목표

- 1) 국제기구들의 정책개발에 대한 국내기관들의 대응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선도하는 국내기관 기능 미흡
 - 연구기관들의 연구와 정책기관들의 수요 사이에 격차가 존재
- 2) IUCN한국위원회의 좌표와 역할을 모색
 - 최신 국제동향에 관하여서는 적기에 해당 정보·지식을 갈무리하여 제공
 - 전문가들을 활성화하여 정보 및 지식의 안테나 역할을 수행

3. 단계별 방법

- 1) 우선 국제적으로 최근 3년간 생물다양성증진 외 관련된 규범 및 목적을 위해 연구되고 촉진되는 방식, 수단, 변화의 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2) 국제적 흐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을

식별한다.

3) 나아가 “정책개발 및 도입 지원”을 선도하며 정책 입안자(정부 및 국회)와 집행자(지자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사이의 연결을 도모한다.

4)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제

- 생물다양성 보전
- 생태계서비스 이해, 홍보, 가치평가, 주류화
- 기후변화 완화, 탄소중립, 그리고 적응
- 지속가능한 발전

4. 회원기관의 실행사례: 자연환경국민신탁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생물다양성법 제2조) 시행기관(동 §16④):

IUCN본부/지역사무소를 통하여 북한에 DMZ 주변 생태계보전을 위한 PES 계약을 능동적으로 실행 가능

2) WCPA OECM* Task Force에 참여: 국민신탁 및 보전협약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정책, 제도,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활성화에 기여

제3절 실행경로¹⁶⁾

제4장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증진 방안¹⁷⁾

제1A절 규정 및 정관

제1B절 조직의 기능과 전략적 목표

제2절 전문성 제고

제3절 연대와 확장

제4절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제5절 추진계획: 단기·중기·장기·수요공급연계 및 조직

16) 본 보고서 제3장 제3절 실행경로는 P33~36 참조

17) 제4장 전체는 P37~45 참조

제3절 실행경로

1. 제1단계

가장 중요한 사항: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도출해야 할 “합의를 통하여”

두 번째 중요한 사항: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지원/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함



(다음페이지)

제2단계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 IUCN 사무국/사무소: 전략계획 및 사업 플랜(pipeline)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배포
- 6개 전문위원회/과한 및 기술적인 전문성 기여할 수 기의 목록 만들어 배포, 관계 단체의 참여/등록/배포 유도
- Council / Regional Committee: 의사결정투표, 이제 설정 및 선별에 대한 워크숍 개최/설명자료 모집과 공유
- 타 국가위원회의 교류: 국제적인 협력 활동 드를 및 개시 (지식 교류 등)
- 국내의 advocacy 아젠다 선별, "행피언" 회원 선정, 지원 회원 모집, 활동 계획 및 개시 (하나의 목소리 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영향력 발휘)
- 국내 형안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필요한 사안 설정하여 워크숍 개최
- 캠페인 및 이벤트 개최, 대중-의사결정권자-policy maker 들의 인식 증진
- 전문성/실행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스규모 working group(전문가/팀) 조성하여 활동 개시
- 공통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제안서 작성, 모금, 사업계획 실시
- 우리나라 교육/특수 의제를 위한 활동
- 국제/글로벌 이벤트와 맞물린 교육/홍보 이벤트 개최
- IUCN 사무국/위원회 등 초청하여 국내 활동 개최
- Sponsorship 체결, 전문인력 고용, communication/IT 유지관리(웹사이트, 뉴스레터 발송)
- 회원단체들의 주기적인 보고, 교류 활동 드모 (몸아가며) 각 단체 발표 등 지속적인 시리즈 활동 개최
- 유의미한 results-based management (분기/연별 보고, 참여전 성과 및 계획 검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생산물

- background, 및 주요 관련 국제 협력 활동 (인사드업, 국제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 등)
- knowledge / event 교류 및 주기적인 보고체계 마련
- 회의 참여 / 투표권 행사 를 위한 전세계 교류 활동 추진
- 우리 회원의 수요 파악, 역량강화 기회 마련
- 국내 전문지역/국가위원회의 네트워크 확장과 확장
- 회원들의 간담, 전문성 파악,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선정하여 적극적인 활동 유도
- 각종 capacity building 기회를 제공
- 협력하여 실행
- 특정 주요 국내 이슈 지정하여 세부 목표와 계획 사업 활동 펼침
- 각 이슈에 대한 국내 구성원 참여/의정률에 의해 동조율 높임
- 국제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 특성 아젠다 발굴 및 전문지식 정리/교류 (전문국가, 고성장 모델 등)
- 국제이벤트 한국에서 연례총회 (WWD 등 국제 컨퍼런스)
- 국내 정책/개발 사업 분야에서 network를 더하여 홍보하여 인식도 높임.

목적 달성을 위한 검직한 분류별 결과

[국제 국내 연계교류]
국제적 활동 다양성/보편
능의 보충에 정보안 형성
유지하여 유의미한 회원
권한행사 도모

**[국내적 연대와 영향력 높이는
목표]**
활발한 논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더 높게
네트워킹을 더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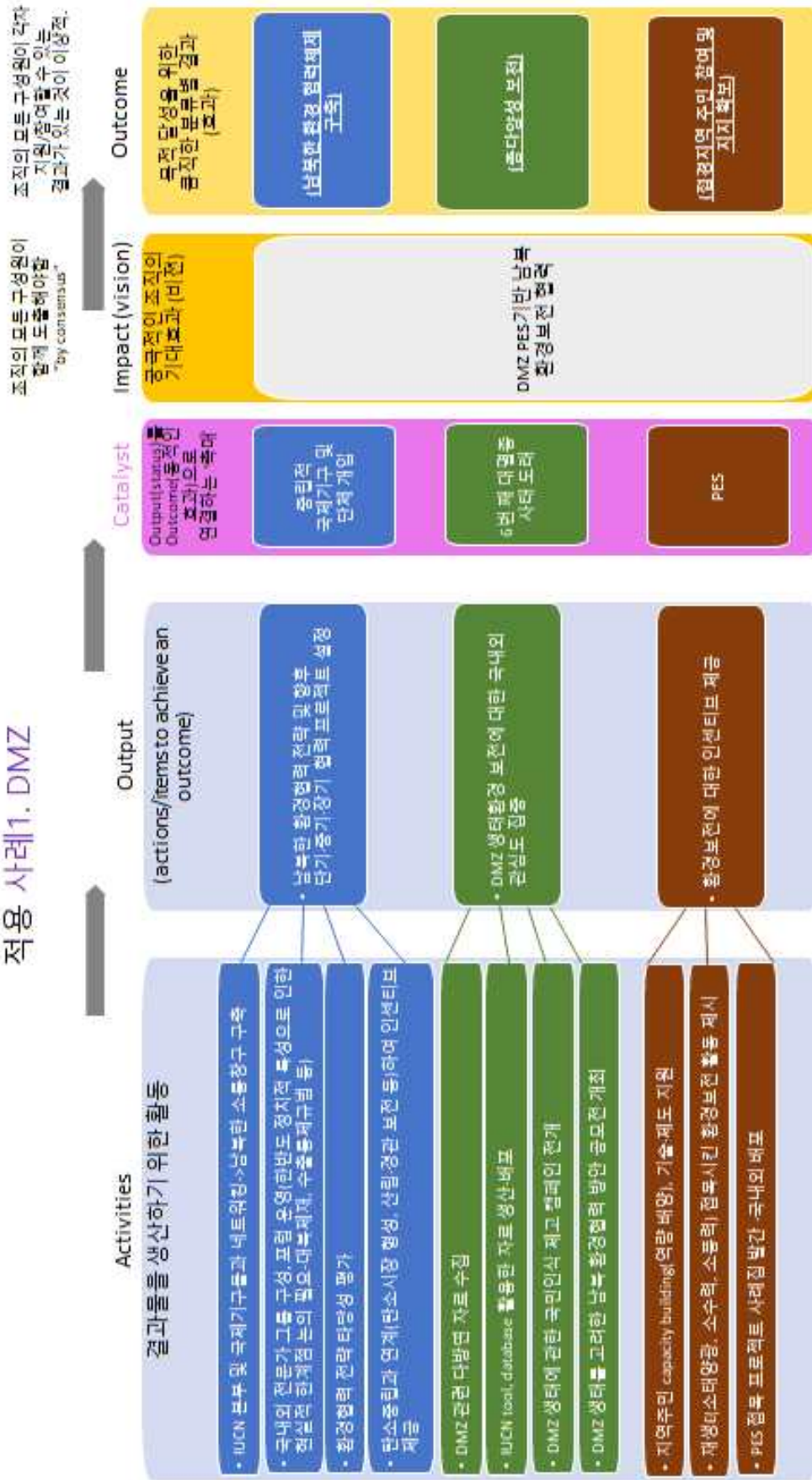
[올림픽 효과 발휘]
국제사회에서 선두 활동으로
주목 받아 국내적으로
생물 다양성/자연환경보전 위상
제고

[건강한 조직]
재정, 인적 자원의 안정성 증대;
results-based management

공극적인
조직의 목적
(5년 안에
달성)

"한국위원회가
국내외적으로
생물 다양성/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유용한 활동을
한다"

적용 사례1. DMZ



제4장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증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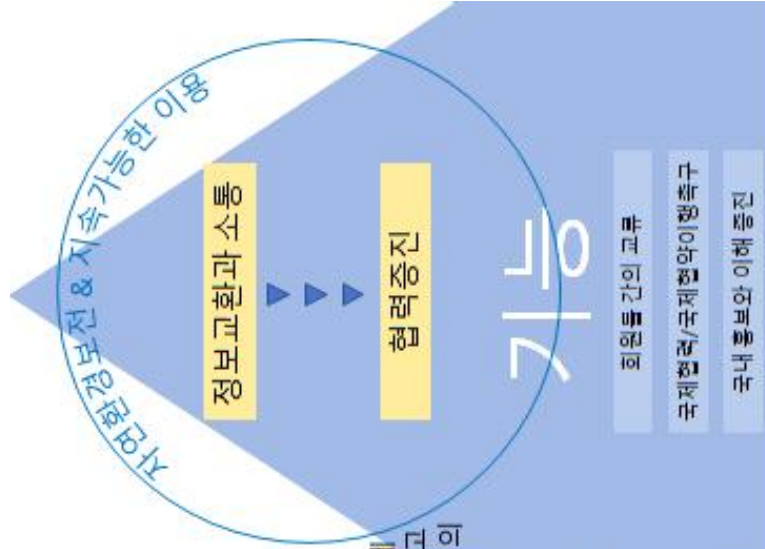
제1A절 규정 및 정관

IUCN 규정 (Statute Part VII):

- IUCN 사업과 조직 거버넌스에 회원의 참여, 협력, 조정을 촉진
- IUCN 사무국, 전문위원회, 국가 및 지역 위원회와 협력해 사업 발굴, 조정, 이행

IUCN 한국위원회 정관:

- 제1조 (목표) 사단법인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는 국내 자연환경보전 활동 이외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향하는 자연의 통합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자원의 적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범지구적 자연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며 회원들 간의 교류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목표로 한다
- 제4조 (사업) 한국위원회는 제1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IUCN과의 협력사업 등 IUCN 관련 사업
 2. IUCN 이 지향하는 이념을 국내에 홍보하며 그 목표를 지원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3.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IUCN 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사업
 4. 자연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를 주장하고 대중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약의 이행을촉구하는 사업
 5. 자연환경에 대한 세계관을 넓히고 범지구적 자연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협력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6. 국내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및 전문가그룹의 협력 체계를 구축 국내 외 자연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7. 위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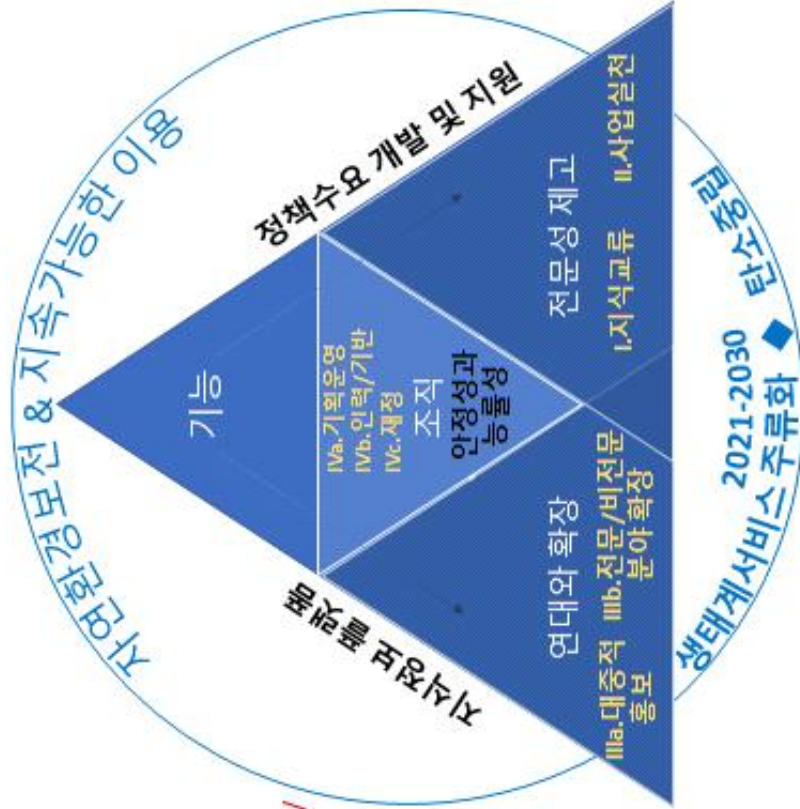
제18절 조직의 기능과 전략적 목표

1. 조직의 기본 목적과 기능

“KRNC는 열린 협력 관계를 활동적으로 유지하여 한국과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된다.”

2. 2021-2030 전략적 목표

생태계서비스 주류화
&
탄소중립



제2절 전문성 제고

I. 지식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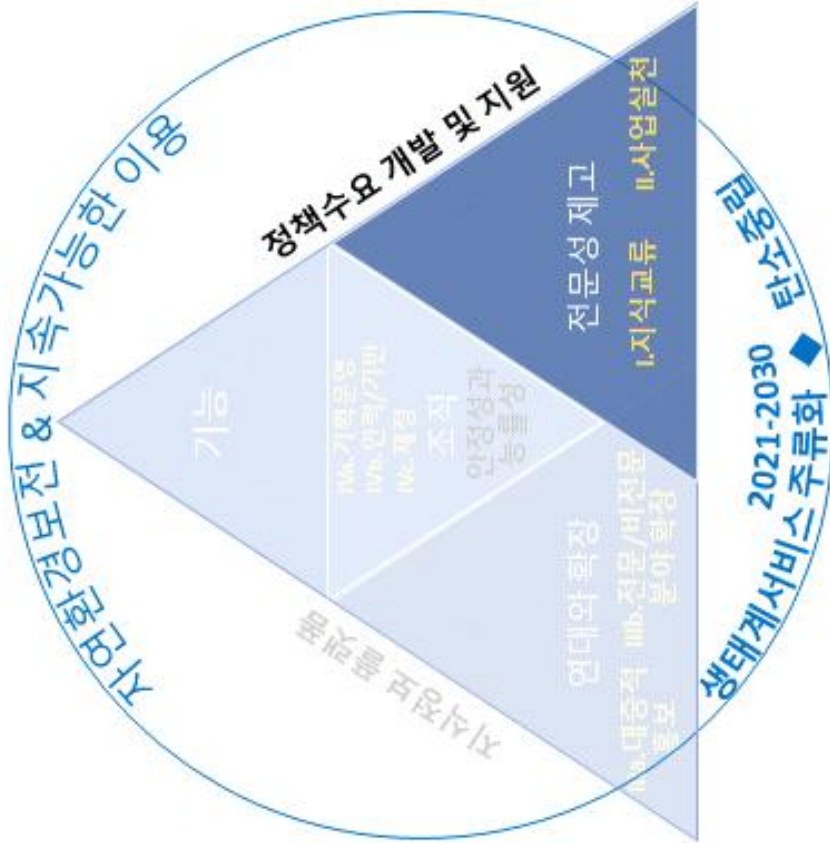
과학 및 기술 지식을 교류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전문성을 활성화 및 발전시킨다.

- 구성원 간의 전문기술/지식 공유 및 공동 개발, 연구, 연수 기회를 개최
- 국내외 기관 및 흐름의 신기술/지식을 모니터링, 취합하여 구성원에게 전달, 구성원의 전문성 홍보

II. 사업실천

국내(#1), 동북아시아 지역(#2), 그리고 세계(#3)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 제공하고 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동원되도록 구성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

- 구성원 각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개역할을 수행, 영향력 강화 필요시 구성원의 참여 도모
- 외부에서 기획되는 활동과 사업 기회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전달하여 중개역할 수행



제3절 연대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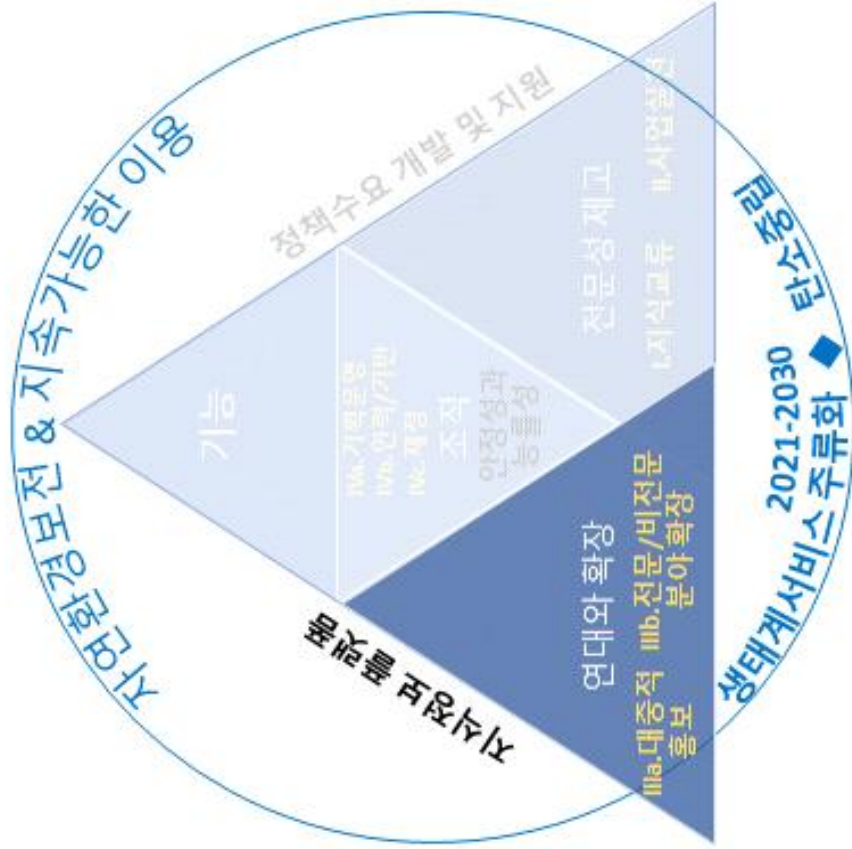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전문분야/업계의 편협성(isolation/silo)을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도록 ... 대중(#1)과 타분야(#2)와 교류하고 연대, KRNC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을 확장시킨다.

IIIa. 대중

- 대중에게 쉽게 닿는 내용의 대외 활동 기획, 운영, 행사 개최 등.

IIIb. 특정 접점 분야

- 색다른 분야와 접점을 모색하고 관계기관을 접촉하여 연대



제4절 조직의 안정성과 능력성

연합체로서 구성원들의 결합을, IUCN조직의 일부로서 활발한 연대를 높이는 연합체의 기능을 정착화하고 능력성을 높인다.

IVa. 기획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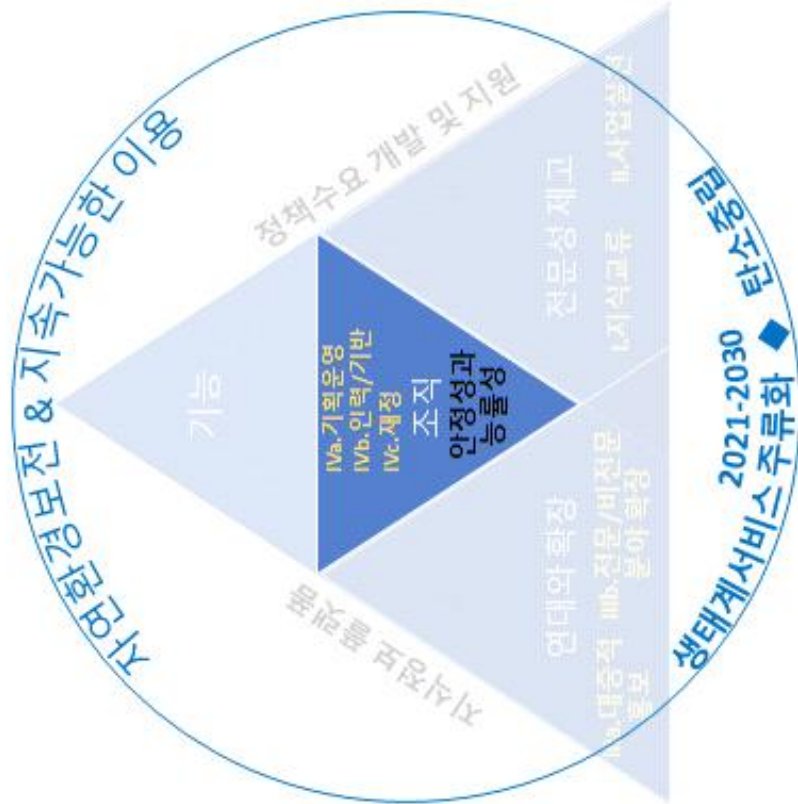
- 조직의 목적과 비전을 수호하고 탄력적으로 발전시키며, 성장과 성과를 도출.

IVb. 인력/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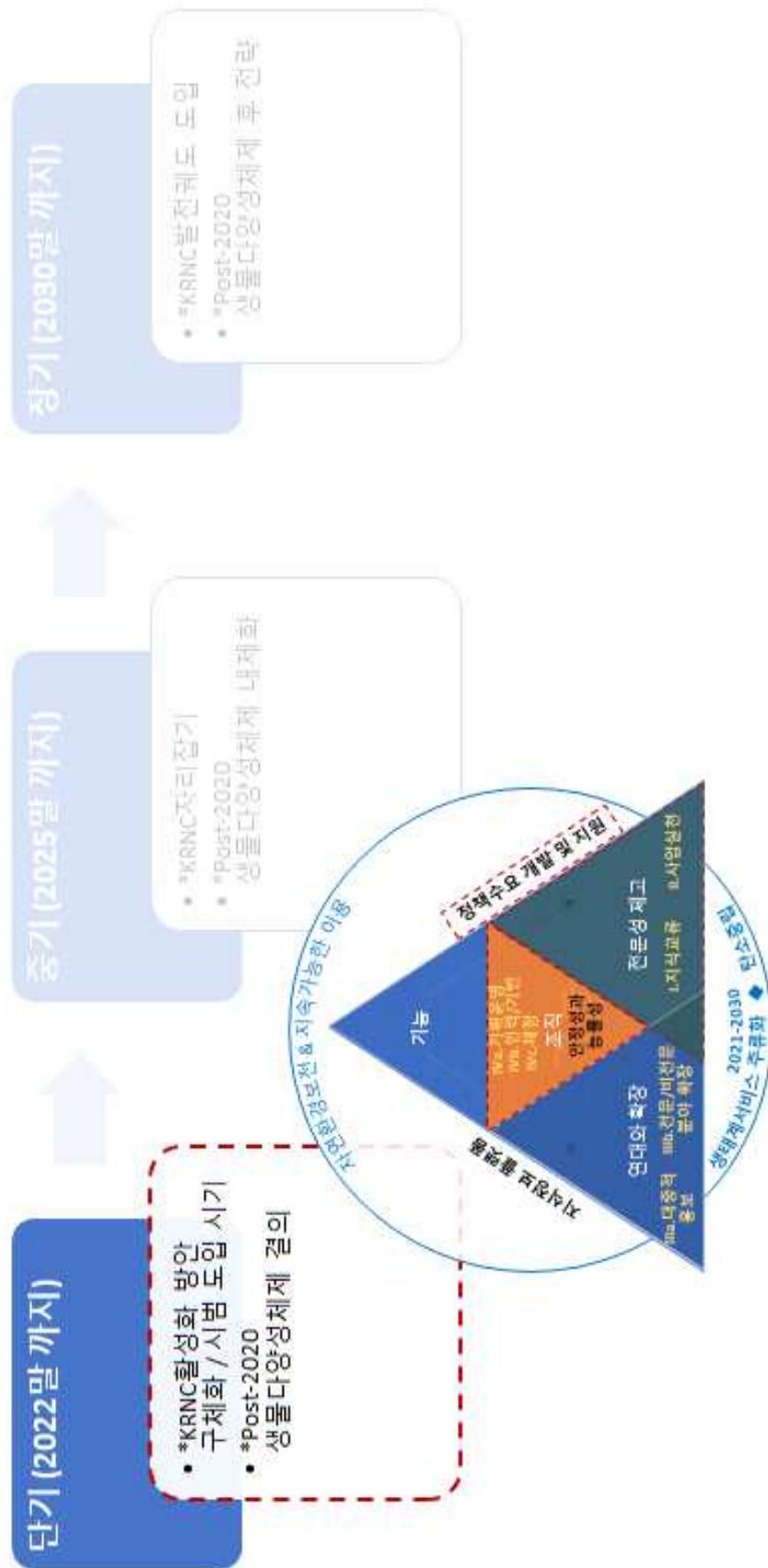
- 조직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기술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개발.

IVc.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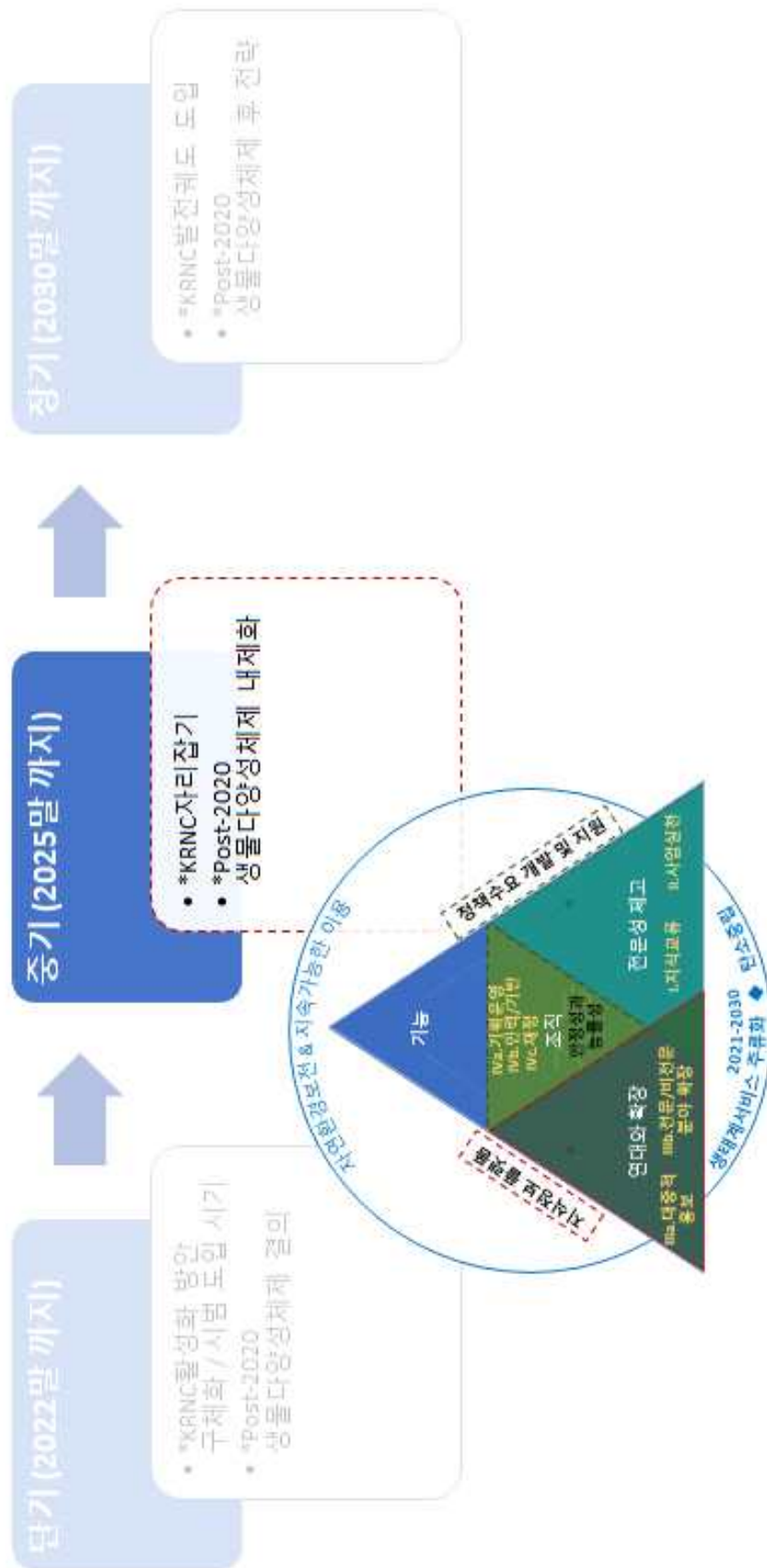
- 활동과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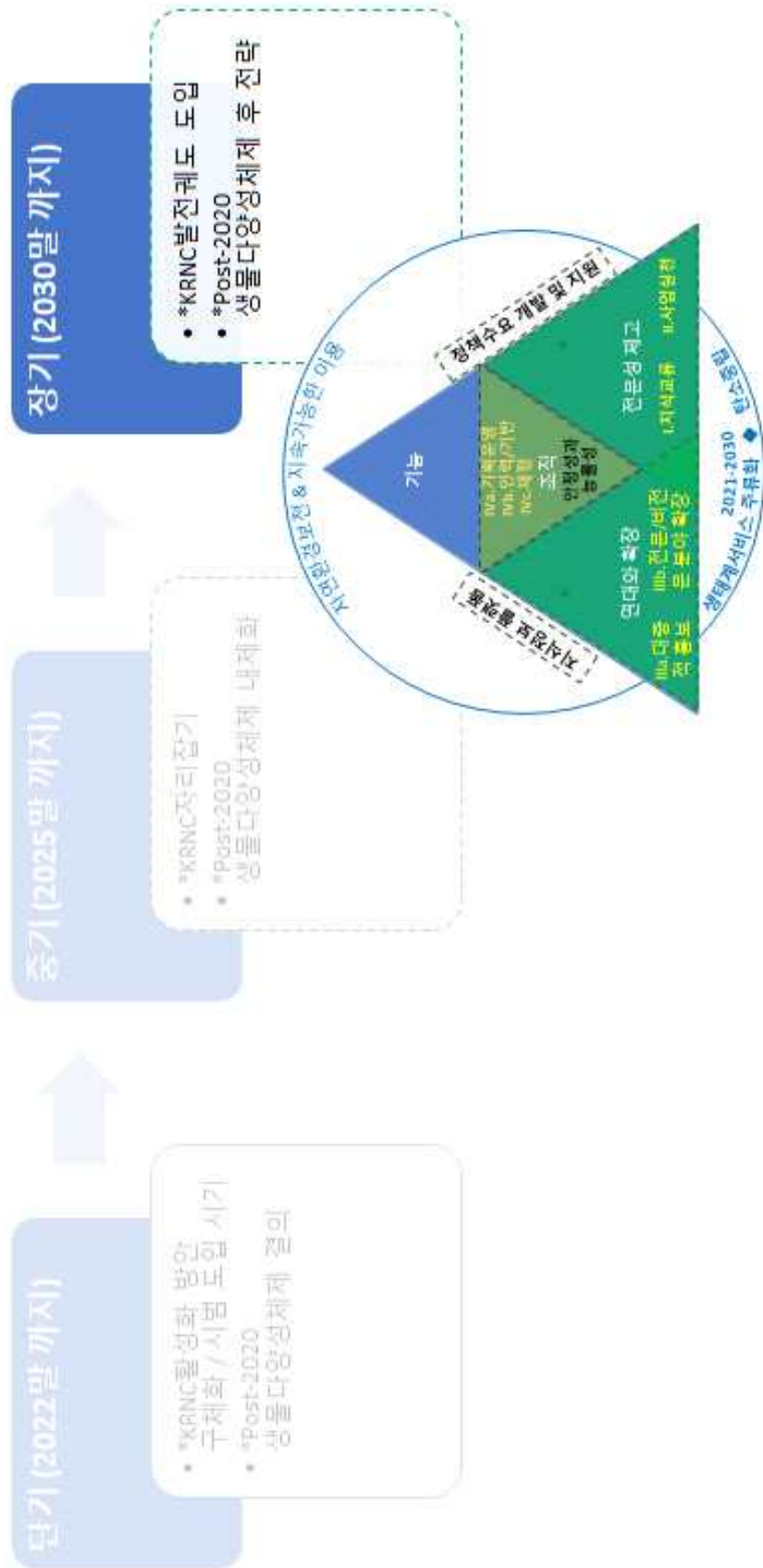
제5절 추진계획: 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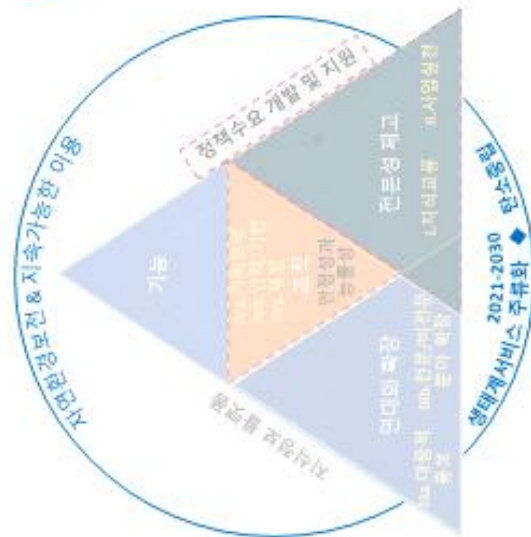
제5절 추진계획: 중기



제5절 추진계획: 장기



제5절 추진계획: 수요공급연계 및 조직



- (1) 전문성 위주
- 수요와 공급 연계 지원

- (2) 조직
- 활성화 방안 설립 및 추진계획 구체화
 - 소통 기반 마련
 - 기초재정지원 유치



제5장 국제동향의 반영과 개발도상국가 역량강화 지원

제1절 IUCN한국위원회의 목적과 비전의 정립

IUCN한국위원회는 이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의 정보와 논의를 정리하여 IUCN한국위원회의 목적과 비전을 정립하였다. IUCN한국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며 연대와 확장을 실현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목적과 비전	한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선도하고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열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각 조직들의 연합체로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점 기능을 수행	
I: 전문성	지식 교류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전문성 제고 과학 및 기술 지식을 교류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전문성의 활성화 및 발전	
	I (1). Internal소통: 구성원 간의 전문기술/지식 공유 및 공동 개발, 연구 및 연수 예) 특정형식의 상시 프로그램 운영 예) 지역/이슈/주제별 심층적 연구 혹은 지식교류 활동	I (2). External소통: 국내외 기관 및 흐름의 신기술/지식을 모니터링, 취합하여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구성원의 전문성 홍보 • KRNC밖 전문가/기관 초청 신기술/지식 배움의 기회 제공 (inward), 축적된 구성원 전문성을 토대로 대외 회의 참여 혹은 개최 (outward) • IUCN및 관련분야의 흐름, 의제, 활동에 대해 분기별 보고 및 설명 (inward); 의제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며 영향력 있는 의사 전달 (outward)
II: 실현 활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활용을 위한 활동과 사업 국내(#1), 동북아시아 지역(#2), 그리고 세계(#3)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제공하며 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동원되도록 구성단체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활동	
	II (1). Internal소통: 구성원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력을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의 참여 도모 예) 국내 정책 논의, 개발로 인한 위기, 캠페인 등 - 영향력 발휘를 위한 구성원 동원 (정책안 분석/의견 조율, 기고, 홍보 등) 예) 생태계, 종, 지역, 이슈 등 보전활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성 공유를 위한 소통의 마당을 제공	II (2). External 소통: 구성원 및 국내외 기관에서 기획되는 활동과 사업 기회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협력을 위한 중개역할 수행 예) IUCN 사무국/지역 사무소 등 사업발굴/진행 중 관심 프로그램 정보의 모니터링/전달 예) 구성원/연합체의 활동과 사업 소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협력기관 확대 (영상, 뉴스레터, 이벤트)
III: 연대와 확장	대중과 타 분야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관성의 확장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전문분야/업계의 편협성(isolation/silo)을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도록 대중(#1)과 타분야(#2)와 교류하고 연대하며, 연합체의 기본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을 확장시킴	
	III (1). 대중: 대중에게 쉽게 닿는 내용의 대외 활동 기획, 운영, 행사 개최 등. • 예)대중 매개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구성원의 참여로 이벤트 개최/메시지 전달	III (2). 특정 접점 분야: 색다른 분야와 접점을 모색하고 관계기관을 접촉하여 연대 예)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련 기업, 교육/연구 기관, 정책/행정가와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형성

IV: 조직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제고 연합체로서 구성원들의 결합을, IUCN조직의 일부로서 활발한 연대를 높이는 연합체의 기능을 정착화하고 능률성을 높인다.		
	<p>IV (1)기획 및 운영: 조직의 목적과 비전을 수호하고 탄력적으로 발전시키며, 성장과 성과를 도출.</p> <p>성과검토 및 기획/전략을 위한 회의 개최</p> <p>조직의 구조 및 거버넌스 체계의 주기적인 검토 구성원의 형평성 있는 참여 유도</p> <p>구성단체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유지</p>	<p>IV (2)인력/기반: 조직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기술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인적자원 유치 및 발전 활동 • 구성원의 다양하고 형평성 있는 채용기부 •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p>IV (3)재정: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유용성과 대외적인 관련성에 필요한 재정 기반 마련/유지.</p> <p>구성원의 참여(회비) 등으로 재정확보</p> <p>재정 안정성을 위한 예산설계, 사용 모니터링과 구성원의 검토/논의를 위한 보고</p>

제2절 조직의 성장과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 구체화

IUCN한국위원회는 기본 목적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탄력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IUCN한국위원회가 전문성 확보, 실천활동, 연대확장, 조직활성화 그리고 기획운영 부문에서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추진할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점진 계획	기본 목적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탄력적으로 나아감		
	<p>단기 (2022말까지)</p> <p>*활성화 방안 구체화(시범 시기) *Post-2020 생물다양성체제 결의</p>	<p>중기 (2025말까지)</p> <p>*자리잡기 *Post-2020 생물다양성체제 내재화</p>	<p>장기 (2030말까지)</p> <p>*발전궤도 진입 *Post-2020 생물다양성체제 후 전략</p>
I: 전문성	지식 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전문성 제고		
I (1) 내부소통	<p><input type="checkbox"/> 소통체계 설계 및 설립: 웹사이트, 내부포털</p> <p><input type="checkbox"/> 구성원 내 지식 교류 / 공동연구 등 세부 프로그램 수요 파악, 프로그램 운영 방식 설계 및 도입</p>	<p><input type="checkbox"/> 지식교류 프로그램 체계화/활성화</p> <p><input type="checkbox"/> (예)축적된 프로그램 기록 및 공동 발간 / 회의 개최</p> <p><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논문게재/연장연구확대</p>	<p><input type="checkbox"/> Post 2030 전략수립</p>
I (2) 외부소통	<p><input type="checkbox"/> 소통체계 설계 및 설립: 정보공유화 연계 (inwards), 웹사이트, 뉴스레터 발송</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기관 및 기구 정보화: 연구소, 연구재단, 대학, 저널, 학회 등</p>	<p><input type="checkbox"/> 해외 네트워크 구축</p>	<p><input type="checkbox"/>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기획재정부의 경험공유프로그램(KSP) 참여</p>
II: 실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활동과 사업		

활동			
II (1) 내부 소통	<input type="checkbox"/> 소통체계 설계 및 설립: I (1). 동일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내 협력 가능 활동, 수요, 인적 전문성 정보화	<input type="checkbox"/> 예)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특정 사업안 마련 (영국 NC)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간의 활동에 협력 사업 추진	<input type="checkbox"/> 연합체로서 '시그니처' 사업 성숙화 (영국NC), 외부기관과 연대/확장에 홍보
II (2) 외부 소통	<input type="checkbox"/> 소통체계설계·설립: I(2).동일 <input type="checkbox"/> 관련 기관 및 기구 정보화: 사업재단, 국내외 NGO, 유관 기업,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협정사무국 등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보전 활동, 캠페인 참여 - 인력 투입	<input type="checkbox"/> 구성원 전문성을 반영하여 UCN사 무국/지역사무소 를 비롯한 해외기 관과 협력사업 발 굴, 다양화
III: 연대 확장	대중과 타분야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관성 확장		
III(1) 대중	<input type="checkbox"/> 기본활동 기록화, SNS 활용 <input type="checkbox"/> 위 기본활동 개최 시 적절한 경우 개방, 홍보	<input type="checkbox"/> 대중 접촉 활동의 체계적 시작 <input type="checkbox"/> 매개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획	<input type="checkbox"/> 협치강화
III(2) 접점 분야	<input type="checkbox"/> 특정 접점 분야 모색 ; 유관 기관 및 기구 목록 적립 <input type="checkbox"/> 접점 분야별 전략기획	<input type="checkbox"/> 자연기반해법(NbS) 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자연기반해법의 산업화 지원
IV: 조직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제고		
IV(1) 기획 운영	<input type="checkbox"/> 활성화 방안 설립: 조직의 목적/비전, 추진계획 구체화 <input type="checkbox"/> 참여위원 및 조직의 세부 구조 설계	<input type="checkbox"/> 파트너십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post 2030 전략 수립
IV(2) 인력 ·기 반	<input type="checkbox"/>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요 파악, 유치 <input type="checkbox"/> 기능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설립/설치	<input type="checkbox"/> 상근인력 보강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보강
IV (3) 재정	<input type="checkbox"/> 기초 재정지원 유치 <input type="checkbox"/> 재정 안정화 중장기 계획 설립	<input type="checkbox"/> 재정기반 다변화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성 확보

제3절 국제동향의 반영

1. 국제동향 개관

본항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하는 기관들의 주요 발간물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발한 비정부/정부/연구기관 및 협력체들의 발간물을 주로 살피고, IUCN을 비롯하여 세계유산을 관할하는 UNESCO, 국제환경협약 중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과 기후변화협약(FCCC)사무국 그리고 관계된 과학·정책 플랫폼(IPBES 및 IPCC)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간행물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의 시너지를 도

모하기 위한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위상이 돋보인다. 자연환경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 위험요소를 완화하며,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사회발전 쟁점들에 관한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경제, 기업경영,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과 실행방안에 반영시키려는 ‘주류화’에 대한 발간물들이 있다. 이러한 보고서 및 범지구적 평가서는 국내의 정책 방향 설정과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종류	분야	기관	제목	연도	URL	면수
(각종)	기후 변화	IUCN	(기후변화 관련 IUCN 주요 발간물 웹페이지)(IUCN Key publications on climate change)	NA	https://www.iucn.org/theme/climate-change/resources/publications/key-publications	(website)
(각종)	유산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주요 발간물) (UNESCO Key publications on natural WHS)	NA	https://whc.unesco.org/en/publications/	(website)
가이드라인	NbS (자연환경기반해법)	IUCN	범지구적 사회의 문제를 위한 자연환경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 to address global societal challenges	2016	https://portals.iucn.org/library/node/46191	114
가이드라인	NbS (자연환경기반해법)	IUCN	IUCN 자연환경기반해법(NbS) 글로벌 기준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ance for using the IUCN Global Standard for NbS	2020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2020-021-En.pdf	78
가이드라인	NbS (자연환경기반해법)	IUCN	기반시설과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생태계 -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Ecosystems protecting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lessons learned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2017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2017-045.pdf	122
가이드라인	NbS (자)	WRI	자연환경기반해법을 고려한 기업의 기후변화완화전략	2021	https://www.wri.org	27

	연 경 기 반 해 법)		Consider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as Offsets in Corporate Cli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ies		g/research/consideration-nature-based-solutions-offsets-corporate-climate-change-mitigation	
가이드 라인	지 속 가 능 성 발 전	UN DESA	UN 세계사회보고서 2021: 지방발전의 재고 The World Social Report 2021: Reconsidering Rural Development		https://unstats.un.org/sites/unstats.un.org/files/world_social_report_2021.pdf	174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적응의 시너지 발휘를 위한 가이드라인 Linking NAP and NBSAP: Promoting synergies in addressing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ssues	2014	https://www.cbd.int/doc/meetings/cop-12/information/cop-12-inf-29-en.pdf	26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완화/적응의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Connecting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2009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bd-ts-41-en.pdf	127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위한 과학적 정보 Contributions from Science to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ima Declaration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2017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bd-ts-89-en.pdf	158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생태계 관리: 산림 외 생태계 기반의 완화 활동을 위한 권고 Managing ecosystem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recommendations to support ecosystem-based mitigation actions that look beyond terrestrial forests.	2016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bd-ts-86-en.pdf	57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생태계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 위험 감소 사례 Synthesis Report on Experiences with Ecosystem-Based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2016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bd-ts-85-en.pdf	110
가이드 라인	기 후 변 화	CBD	생태계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 설계 가이드라인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cosystem-based	2019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c	154

			approachestoclimatechangeadaptation anddisasterriskreductionandsupplement aryinformation		bd-ts-93- en.pdf	
가이드 라인	기후 변화	IPBES -IPCC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전문기술 보고서 (forthcoming2021technicalpaperBDand CC)	2021		
가이드 라인	기후 변화	IUC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속 자연환경기반해법(Nbs) - 2020까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NbSinNDC-Synthesisandrecommendati onsforenhancingclimateambitionandacti onby2020	2019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2019-03 0-Fn.pdf	62
가이드 라인	기후 변화	UNES CO	세계자연유산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가이드 ClimateChangeAdaptationforNaturalWor ldHeritageSites-APracticalGuide	2014	https://wh c.unesco. org/en/se ries/37/	88
가이드 라인	보호 지역	IUCN	보호구역 관리 모범규준 시리즈 30호: 생태적 네트워크 및 통로 BestPracticeProtectedAreaGuidelinesSe riesNo.30:Guidelinesforconservingconn ectivitythroughhecollogicalnetworksandco rridors	2020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PAG-03 0-Fn.pdf	140
가이드 라인	보호 지역	IUCN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보호지역의 역할 Protectedareasastoolsfordisasterriskred uction	2015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2015-00 1.pdf	48
가이드 라인	유산	IUCN	세계유산, 야생, 대규모 육지와 해양 구역 Worldheritage,wilderness,andlargelands capesandseascapes	2017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2017-02 8.pdf	83
가이드 라인	유산	UNES CO	유산 증진을 위한 도구 - 세계자연유산 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EnhancingOurHeritageToolkit-Assessin gmanamenteffectivenessofnaturalWo rldHeritagesites	2008	https://wh c.unesco. org/en/se ries/23/	108
가이드 라인	유산	UNES CO+	세계 유산자원매뉴얼: 세계자연유산 관리 WorldHeritageResourceManual:Managi ngNaturalWorldHeritage	2012	https://wh c.unesco. org/en/m anaging- natural-w orld-herit age/	101
가이드 라인	주류 화	IUCN	통합적 계획 -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에 관련한 정책 및 법률적	2019	https://po rtals.iucn	140

			도구 Integrated Planning-Policy and Law Tool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climate change		org/library/files/ documents/EPLP-088-En.pdf	
기준 지침	NbS (자연환경기 반해법)	IUCN	IUCN 자연환경기반해법(NbS) 글로벌 기준 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 lutions	2020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2020-02 0-En.pdf	30
기준 지침	금융	The EP Assoc	적도 원칙 (제4차) Equator Principles(EP4)	2020	https://eq uator-prin ciples.co m/docum ents-reso urces/	37
기준 지침	보호 지역	IUCN	보호 및 보전지역 녹색목록의 글로벌 지침 (버전 1.1) Green List of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Global Standard ver 1.1	2018	https://iuc ngreenlist .org/stand ard/globa l-standar d/	43
기준 지침	보호 지역	IUCN	KBA: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 식별을 위한 글로벌 기준 (버전 1.0) KBA: A Global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Biodiversity Areas Version 1.0	2016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sites/lib rary/files/ document s/2016-04 8.pdf	46
기준 지침	생태 계	IUCN	생태계 적색목록 적용 가이드라인 (버전 1.1) Red List of Ecosystems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UCN Red List of Ecosystems categories and criteria (ver 1.1)	2017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node/4 5794	110
기준 지침	종	IUCN	위기종 적색목록 분류와 기준 (버전 3.1)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3.1	2012	https://po rtals.iucn. org/librar y/node/1 0315	38
데이터 베이스	법률	IUCN, UNEP, FAO	EcoLex: 환경법 보관함 EcoLex: The gateway to environmental law	NA	https://w ww.ecolex org/	(we bsit e)
데이터 베이스	유산	IUCN	IUCN 세계유산 전망 데이터베이스 IUCN World Heritage Outlook	NA	https://w orldherita geoutlook iucn.org/	(we bsit e)
데이터 베이스	종	IUCN	GISD: 세계 외래침입종 데이터베이스 GISD: Global Invasive Species Database	NA	http://ww w.iucngis d.org/gis d/	(we bsit e)
데이터	종합	IUCN	PANORAMA: 건강한 플레닛을 위한	NA	https://w	(we

베이스			해법 사례 모음 PANORAMA: Solutions for a Healthy Planet (archives of case examples)		www.iucn.org/resources/conservation-tools/panorama	(website)
도구 (tools)	기업	UNEP	IBAT: 기업을 위한 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 IBAT: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for Business	NA	https://www.ibat-alliance.org/	(for purchase)
도구 (tools)	종합	IUCN	STAR: 종 위기성 감축 및 복원을 위한 기준 - 과학기반의 종보호 목표를 위한 공간적 기준 STAR: (forthcoming) Species Threat Abatement and Restoration (STAR) metric - a metric for spatially explicit contribution to science-based species targets	2021	https://www.iucn.org/resources/conservation-tools/species-threat-abatement-and-restoration-star-metric	(website)
목표	종	CBD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21-2030 (forthcoming) 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 (2021-2030)	2021	NA	NA
목표	종합	CBD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2011-2020) Aichi Biodiversity Goals (2011-2020)	2011	https://www.cbd.int/sp/targets/	
분류/ 등급 데이터 베이스	보호 지역	IUCN	보호 및 보전지역 녹색목록 Green List of Well-Managed Protected Areas	NA	https://iucnngreenlist.org/	(website)
분류/ 등급 데이터 베이스	보호 지역	IUCN	KBA: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 KBA: Key Biodiversity Area	NA		(website)
분류/ 등급 데이터 베이스	보호 지역	IUCN	WDPA "플레닛 보호": 세계 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 WDPA "Protected Planet":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NA	https://www.protectedplanet.net/en/thematic-areas/wdpa?tab=WDPA	(website)
분류/ 등급 데이터 베이스	생태 계	IUCN	생태계 적색목록 Red List of Ecosystems	NA	https://iucnrl.org/	(website)
분류/ 등급 데이터 베이스	종	IUCN	위기종 적색목록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NA	https://www.iucnredlist.org/	(website)
평가 보고	경제	UK Govt	Nasruinta 보고서: 생물다양성의 경제 Nasruinta Review: 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l-report	610

					t-the-economics-of-biodiversity-the-dasgupta-review	
평가 보고	경제	UNEP	TEEB: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관점 주류화를 위한 보고서 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Mainstreaming the Economic of Nature: A Synthesis of the Approach, Con- 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EEB	2010	http://teebweb.org/publications/teeb-for-synthesis/	39
평가 보고	기후 변화	UN -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제5차) Assessment report on climate change (5th)	2014	https://www.ipcc.ch/reports/?rp=ar5	
평가 보고	유산	IUCN	IUCN 세계유산 전망 제3차: 세계자연유산의 보전에 대한 평가보고서 IUCN World Heritage Outlook 3: A conserva- tion assessment of all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2020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2020-035-En.pdf	104
평가 보고	종합	CBD	GBO: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 (제5차) GBO: Global Biodiversity Outlooks (5th)	2020	https://www.cbd.int/abo5	211
평가 보고	종합	UN - IPB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글로벌 평가 보고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IPBES 발간)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19	https://ipbes.net/global-assessment	60
평가 보고	종합	WRI	MFA: 새천년 생태계 평가보고서 - 생물다양성 편 MF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biodiversity synthesis	2005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documents/document.354.aspx.pdf	100
평가 보고	종합	WRI	MEA: 새천년 생태계 평가보고서 - 종합 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general synthesis	2005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documents/document.356.aspx.pdf	155

2. IUCN의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NbS)이란, IUCN에 따르면,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거나 복원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적응적으로(effectively and adaptively) 도출하고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¹⁸⁾ 유럽위원회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에 의하여 촉진되고 뒷받침되는 비용효과적이면서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복원에 이바지하는 해법으로 정의한다.¹⁹⁾

Such solutions bring more, and more diverse, nature and natural features and processes into cities, landscapes and seascapes, through locally adapted, resource-efficient and systemic interventions".[1] In 2020, the EC definition was updated to further emphasise that “nature-based solutions must benefit biodiversity and support the delivery of a range of ecosystem services.” [2] Research and Innovation projects on NBS funded by the EU Framework Programme need to respond to this definition.[3]

1) 자연기반해법의 목표

자연기반해법(NbS)은 사회발전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적·사회적 가치들을 반영하고 생태계 복원과 생태계의 재생 및 서비스 제공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식에 따라 인류복지를 보호함을 목표로 삼는다. 자연기반해법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물 안전, 인체건강, 재난위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같은 주요한 사회적 도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²⁰⁾

2) 자연기반해법의 원리

자연기반해법을 위하여 일련의 예비적 원리 일람표가 개발되었다. IUCN 2013-2016 프로그램들은 자연기반해법의 원리들에 관한 최초의 일람표로서 ‘생태계서비스 접근법’²¹⁾(Ecosystem Services approach: 생태계에 대한 접근과 그 원리들)에 관한 현존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분석하였다. 자연기반해법의 정의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일련의 자연기반해법 원리들은 IUCN의 자연기반해법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필수이다. 자연기반해법의 원리로 제안된 것들은 모두 8가지이다.

18) <https://www.iucn.org/theme/nature-based-solutions>

19)

https://ec.europa.eu/info/research-and-innovation/research-area/environment/nature-based-solutions_en

20)

<https://www.iucn.org/commissions/commission-ecosystem-management/our-work/nature-based-solutions>

21) 생태계서비스 접근법에 관한 상세는 황은주,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이익공유 법리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pp.16~23, 참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보호막으로서 자연기반해법 개념체계]

3) 8가지 원리들²²⁾

- (1) 자연보전 규범들(및 원리들)을 수용한다.
- (2) 사회적 변화들에 대응하여 단독으로 또는 (기술적 해법 및 기능적 해법과 같은) 다른 해법들과 통합적으로 이행한다.
- (3) 전통지식, 지역지식 및 과학지식을 포함하여 특정한 장소의 자연적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결정한다.
- (4) 공정하고 공평하게(in a fair and equitable way) 투명성과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편익을 생산한다.
- (5)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생태계의 능력을 유지한다.
- (6) 경관 규모(landscape scale)에 따라 적용한다.
- (7) 개발로 얻는 약간의 직접적 경제편익과 전문야에 걸쳐 생태계서비스를 생산하는 미래의 선택(future options) 사이에 이익교환(trade-offs)을 인식하고 실행한다.
- (8) 구체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 수단 또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의 일부이다.

22)

<https://www.iucn.org/commissions/commission-ecosystem-management/our-work/nature-based-solutions>

4) 생태계 기반 접근을 위한 보호막

자연기반해법을 짜고 그 적용을 고려할 때에는 이것이 사회적 변화들에 대처하는 생태계 기반 모든 접근법들을 망라하는 보호막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에 접근하는 5가지 방식

자연기반해법 접근방식	사 례
생태계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Engineering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구체적 쟁점 관련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osystem-based adaptation Ecosystem-based mitigation Climate adaptation services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기반시설 관련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ur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생태계 기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생태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a-based conservation approaches, includ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출처: <https://www.iucn.org/theme/nature-based-solutions>

이 접근법들은 대부분 자연기반해법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실재하였고 일반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정의를 충족시킨다. 예컨대, 이것들은 생태계서비스가 지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하고 생태계서비스에 대하여 개입한다. 따라서 이 접근법들은 폭넓은 개념(IUCN의 자연기반해법 체계를 설명하는 다음의 그림을 참조)으로서 자연기반해법 아래 덩어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운영체계의 개발에 기여한다.

IUCN의 자연기반해법 관련 활동

- 파노라마 파트너십 창안 (Panorama Partnership Initiative)²³⁾: 건강한 지구를 위한 해법
- 지구생태계관리프로그램(Global Ecosystem Management Programme)
 - Ecosystem-based Adaptation

-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 지구 물 프로그램 (Global Water Programme)
 - Water and Nature
 - WISE-UP to climate - Water Infrastructure Solutions from Ecosystem Services
- 지구 보호구역 프로그램 (Global Protected Areas Programme)
 - Blue Solution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한 해양
- 지구 산림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Global Forest and Climate Change Programme)
 -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²⁴⁾
- Global Marine and Polar Programme (지구해양 및 극지 프로그램)
 -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Oceans²⁵⁾
- 환경법 프로그램 (Environmental Law Programme)²⁶⁾
 - Environmental Law Programme works in strengthening governance frameworks and structures related to Ecosystem-based Adaptation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rough IUCN Environmental Law Centre
- IUCN 위원회들 (Commissions)
 - Natural Solutions, WCPA
 - Protected Area Climate Change Specialist Group, WCPA
 - People and Nature, CEESP
 - Natural Resource Governance Framework, CEESP
 - Sustainable Use and Livelihoods, CEESP
- 지역사무소와 국가위원회들(Regional Offices & National Committees)
 - IUCN Regional Office for Oceania work on NbS, through the Water and Wetlands Programme and Pacific mangroves initiatives
 - IUCN Centre for Mediterranean Cooperation work to empower civil society for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NbS

- IUCN Europe work on NbS in the urban context, with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 IUCN French National Committee work on NbS
- IUCN ORMACC²⁷⁾: Regional Office for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ORMACC works on EbA in transboundary basins and the promotion of Blue Carbon in the Caribbean. It also works on building financial mechanism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UCN의 자연기반해법(NbS) 관련 인적 네트워크

- CEM NBS Group lead: Emmanuelle Cohen-Shacham
- CEM NBS Group Co-Lead: Diego Alonso Portugal del Pino
- CEM NBS Focal point: Angela Andrade
- WCPA NBS Focal Point: Nigel Dudley
- Secretariat: Radhika Murti and Stewart Maginnis
- Special Advisors Rudolf de Groot and Sasha Alexander

5)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농생태학

농생태학(agroecology)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식량 체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식물, 동물, 사람 및 환경의 상호작용을 최적화시키려는 생태적 개념과 원리를 말한다. 이는 1차산업 즉 농림어업 부문에 적용되는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생태학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면서 식량생산과 식품안전 그리고 영양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의 복원을 돕는다. 농생태학은 복원력을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²⁸⁾

FAO는 이용가능한 경작지와 비옥한 토양이 감소하고 청정하고 수산물이 풍부한 해역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며, 자연과 (가족)농업인들의 연대

23)

<https://www.iucn.org/theme/protected-areas/our-work/protected-area-solutions/panorama-solutions-a-healthy-planet>

24)

<https://www.iucn.org/theme/forests/our-work/slowing-global-deforestation-rate-and-primary-forests/slowing-global-deforestation-rate>

25) <https://www.iucn.org/theme/marine-and-polar/our-work/climate-change-and-ocean>

26) <https://www.iucn.org/theme/environmental-law>

27) <https://www.iucn.org/regions/mexico-central-america-and-caribbean/climate-change>

28) <http://www.fao.org/fao-stories/article>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family farmers)를 중시하면서, “보다 적은 요소들을 가지고 보다 많은 생산을 도모한다”(more with less)는 표어 아래 농생태학의 10대 원리, 즉 ①다양성, ②공동창조와 지식공유, ③상승효과, ④효율, ⑤자원순환, ⑥복원력, ⑦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가치, ⑧문화와 식품전통, ⑨책임지는 협치(responsible governance), ⑩순환과 통합의 지역경제를 상호연계하고 통합하는 해법(solutions from connections)을 제시한다.²⁹⁾

3. 생태계서비스의 활용

IUCN이 인용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계서비스(ES)가 지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서 유출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연기반해법의 내용을 이루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관념주의 철학자들의 언명대로, 인식의 주관이 인식의 대상을 결정짓고(Kant), 인식의 범주(悟性)에 따라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듯이(Hegel), 생태계서비스는 “같은 곳(생태계)에서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 생물다양성법 개정법³⁰⁾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체계화함으로써 자연기반해법을 제도화하였다.

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즉 편익이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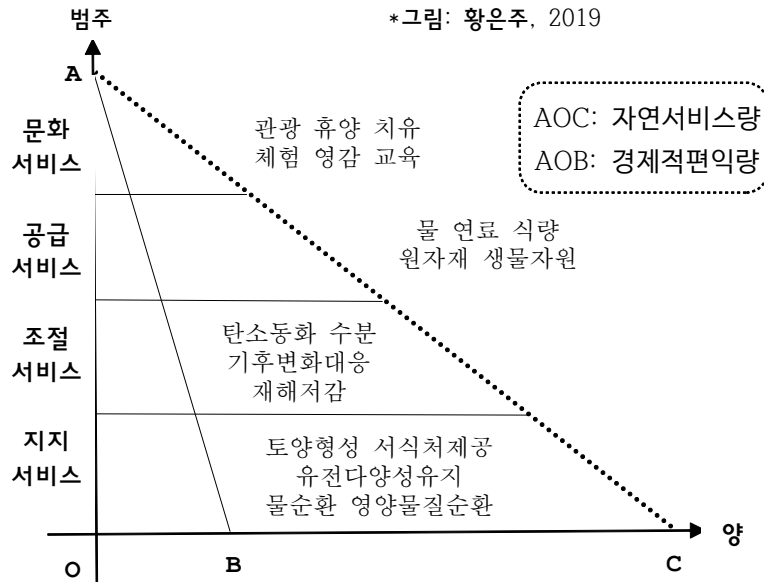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2005)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providing service: 경관·공기·물·연료 등),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기후조절·질병예방·풍수해조절), 지지서비스(supporting service: 서식지 보전·영양소순환·토양형성) 및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 레크리에이션·휴양·교육 및 체험 등)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29) Ibid.

30) 생물다양성법 개정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일부개정]

31)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providing service) (나)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 (다) 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 (라) 토양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supporting service)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benefits)을 말한다.

생태계서비스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의 범주와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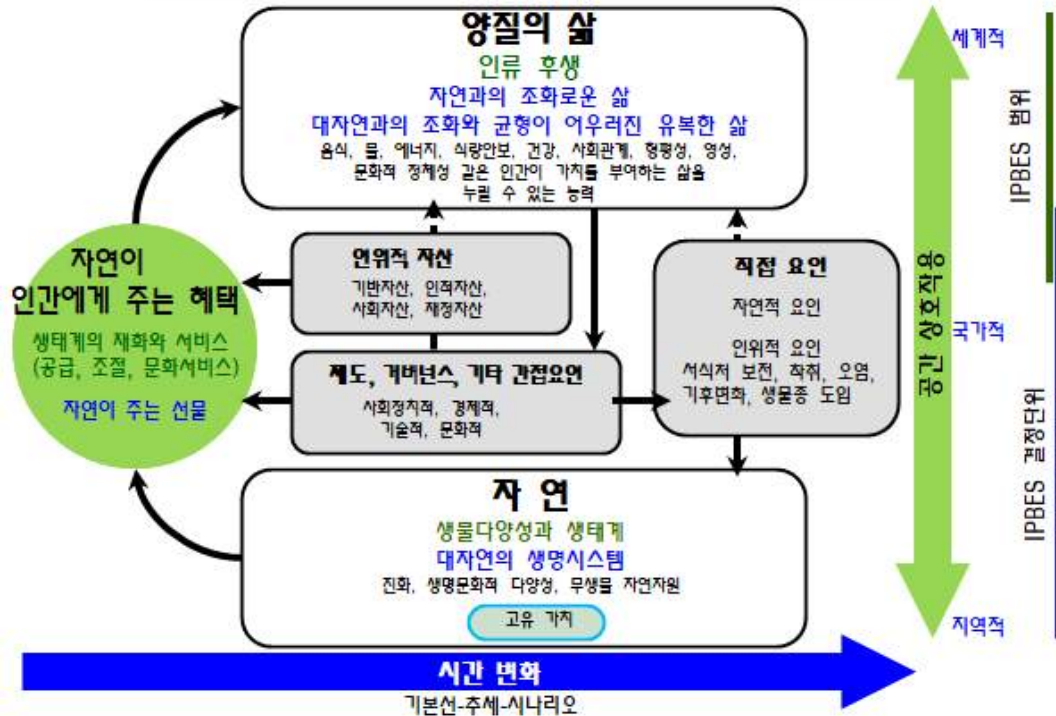
그동안 생태계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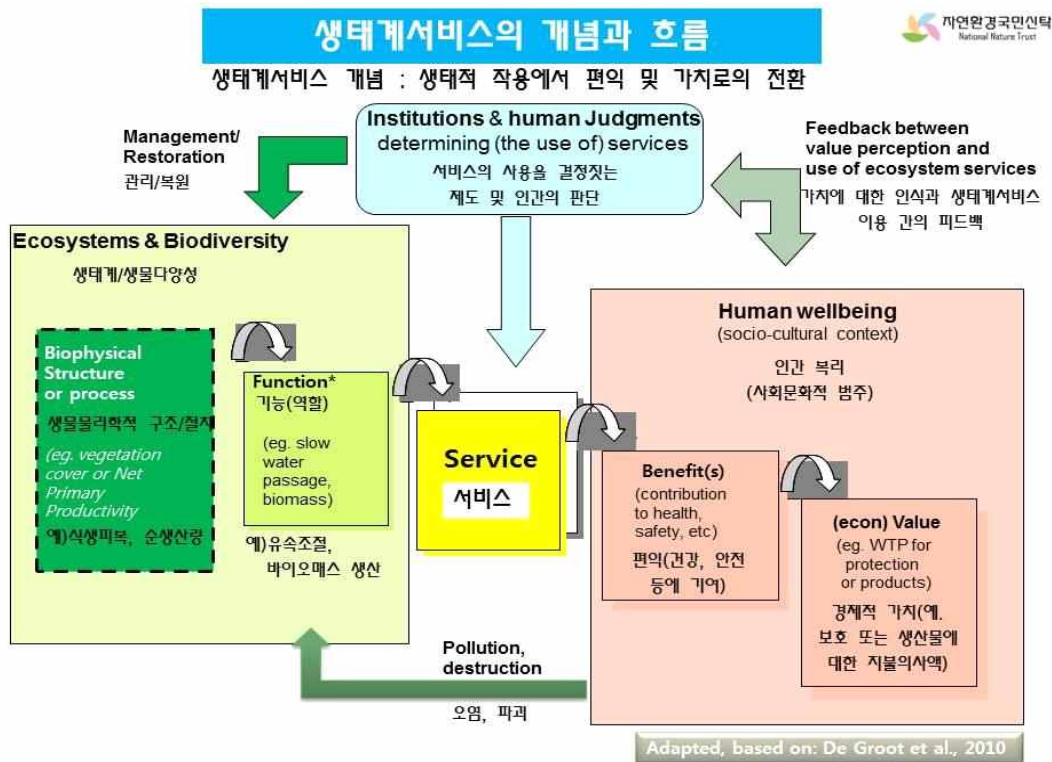
생태계서비스 중 경제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생태계서비스는 방대한 생태계서비스 → 경제적 후생을 주는 생태적 편익 → 가치 환산과 거래가 가능한 공급서비스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인류와 관련을 맺었다. 종래 시장은 위 그림의 삼각형 AO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받지만 이 서비스들의 양이 모두 과학적으로 평가되거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환산되지는 아니한다. 시장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중 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극히 일부의 편익(위 그림의 작은 삼각형 AOB)만을 경제적 거래 및 생태계서비스지불(PES)의 객체로 파악한다(황은주, 2016).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 (출처 : IPBES 결정문 2/4)

자연원공국민연합
National Nature Trust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결부된 자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불충분하면 생태계서비스가 열악해진다. 인류가 본원자산인 생태계로부터 서비스를 계속 인출하기만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염과 파괴로 인하여 생태계서비스는 감축되거나 절멸할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제도화하고 적절한 단계에서 생태계의 유지·복원을 위하여 재정을 투자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드 그루트(De Groot, 2010) 교수의 위 그림은 생태계서비스의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생태계의 유지·복원을 향한 인류의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출처: De Groot, 2010

독일 국제협력공사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가 간행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개발계획의 수립』 (Integrating Ecosystem Services into Development Planning: IESDP)(2012년/개정판 2018년³²⁾)은 생태계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분석한다. GIZ의 IESDP 지침(2012/2018)은 개발계획 입안자들에게 ①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의존과 영향 이해하기 ②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생태계서비스 및 관련 생태계 파악하기 ③생태계서비스의 현재상태 및 경향을 평가하고 개발계획에 미칠 위험과 기회 분석하기 ④확인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수단 개발하기 및 ⑤선택된 전략과 수단을 이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 수립하기와 같은 방법론을 제시한다.³³⁾

빛의 마술과 경관서비스

일본 큐슈에 있는 이케야마(池山 水源地)³⁴⁾ 명수(明水)는 빛과 수생태계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이다. 영화로 잘 알려진 「메디슨

32) <https://www.cbd.int/cepa/cepa-fair/2018/presentations/cepa-fair-2018-giz-values-pub.pdf>

33) <https://www.giz.de/en/worldwide/41607.html>

카운티의 다리」에서 남자 주인공은 “빛이 적당하지 않아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며 하루 밤 묵고 가기를 청하면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여심을 흔들었듯이, 같은 공간이라도 자연은 빛의 연출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산 명수에서도 빛은 물 속 수생식물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동영상으로 담아도 카메라가 벅차하고, 정지 화면으로 담더라도, 카메라의 눈은 자연의 빛을 따라잡지 못한다. 사진을 찍다 말고, 녀를 놓고 바라볼 뿐이다. 자연이 제공하는 경관서비스는 종래 익숙했던 공간에서 시간대에 따라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 ‘빛의 마술’을 선사한다.

2) 국내외 정책동향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생태계서비스 관련 국제규범

연 도	국제규범	비 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UN 총회
2010년 채택 2012년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COP-10)
2010년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아이치 COP-10)	COP-10
2016.1.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총회

유럽연합의 경우에, 회원국은 2020년까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복원 정책을 이행할 책무를 부담한다. EU는 전체 회원국들의 생태계서비스 흐름을 계정화·지도화하고 환경친화적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구매를 시범 프

로그래프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정책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U Guidance on Integrating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to Decision-making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19 July 2019

No.Cion doc.: SWD(2019) 305 final part 2/3

4.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 Eu Policy Implementation

4.1.Key Eu Decision-Making and Funding Instruments

4.1.1.Environmental assessments

4.1.2.EU instruments and national and regional programming for their implementation

4.1.3.EU Better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tools

4.2. Nature and Biodiversity

4.3. Eu Water Policy

4.4. Eu Marine Policy

4.5. Eu Thematic Soil Strategy

4.6. Eu Climate Policy

4.7. Eu Agriculture and Forest Policies

5. Mainstreaming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 Spatial Planning

5.1.Landscape And Spatial Planning Frameworks In The Eu

5.2.Urban Ecosystem Services And Urban Planning

5.3.Integrating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to Maritime Spatial Planning

6. Natural Capital And Ecosystem Services In Business Decision-Making

6.1.Why Integrate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to Business Decisions?

6.2.Legal And Policy Context

6.3.Existing Communities And Resources

6.4.How To Integrate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to Business Decisions

6.4.1. A Stepwise Approach: the Natural Capital Protocol

6.4.2. A Few Examples of Tools and Methodologies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서 시범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에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약

속하였다.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12, 2014.09.29~10.17, 평창) 개최시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DMZ 일원의 생물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행사(side-event)의 필요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 생태계서비스 편익과 비용

생태계서비스 보상(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은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제(PES)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해당 생태계로부터 유출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의 수요를 감축하거나 의무 이행 내지 불편을 감수하는데 따르는 대가[보상]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보상은 법률에 따라 강제로 실시되거나 계약에 따라 임의로 실시될 수 있다.

자연혜택 편익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임의예시)

자연혜택의 편익			자연혜택의 비용		
혜택부문	혜택종류	비중	지출부문	프로그램	비중
지지혜택	①생태계·서식지유지 ②생물다양성 보전 ③물순환체계(水文)	수 우 양	자연혜택 복원·유지	①환경오염 예방·정화 ②생태계·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제공	수
조절혜택	①수질·공기정화 ②온실가스저장 ③꽃가루받이(수정)	미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①주민역량강화 ②일자리 창출 ③삶의 질 향상	우
공급혜택	①물 ②농림·축산·수산물 ③생물자원·유전자원	제외	공공 캠페인	①공평한 이익공유 ②환경생태교육 ③지속가능발전 달성	미
문화혜택	①생태관광 ②자연치유·영성체험 ③경관·음(音)풍경	제외 제외 무상	R&D	①자연혜택의 과학적 평가·경제가치환산 ②자연혜택지불제운영	양

*참조: 기후·공동체·생물다양성표준(Climatic,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CCBS)

4)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동태적 비용편익 분석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은, 상기 별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입지 타당성을 평

가하는 항목으로서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환경의 보전을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한편 ②구체적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생태환경 분야중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을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서식지, 생태축, 경관, 동·식물상 또는 자연환경자산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태적 요소들이며, 자연환경의 생태적 또는 비생태적 이용가치 내지 존재가치들을 반영하지만, 생태계의 객관적 존재량에 관한 현재와 같은 분석만으로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비용편익 분석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UNEP의 환경영향평가 틀(EIA Module)이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지표(index)로 설정하고 그 세부 기능들을 평가척도(indicator)로 활용하고 있음은 개발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존재량 분석만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정책의 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정비

가. 정책형성

- 행정계획반영: 국가환경, 자연환경, 해양·연안, 산지·산림, 물·에너지 관련
- 공동협력: IPBES등 국제협력 및 국내외 관계기관간 공조
- 대중인식 증진: 환경교육, 갈등예방 및 캠페인

나. 체계화

- 법제도 개선: 환경법령 및 국토·해양·산림 법령의 정비
- 물리적 공급기반의 확충: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환경영향평가(EIA)와의 연계
- 개발계획에 생태계서비스를 반영하기: 이익교환 및 시나리오 수립

다. 과학기술적 접근

- 생물군계(biome)의 분류 및 평가(assessment)계획의 수립·시행
- 조사·평가의 틀(frame) 구축
- 생태계서비스(자연자본)의 계량화(assessment)
- 모델링
- 지도작성(mapping)

라. 경제적 접근

- 마케팅: 생태계서비스 시장 개척 및 상품(생태관광·휴양 등)의 개발
- 생태계서비스 가치 환산(valuation)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촉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3) 통합지침의 수립

가. 과학적 평가의 설계

- 예비검토(스크리닝): EIA(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통합
- 이해당사자 파악

나. 연관분석

- 중점평가항목설정(스코핑): EIA 절차와 통합
- 비용편익분석(BCA) 실행

다. 종합분석

- 과학적평가(assessment): 모델링(수학적계량모형)+지도(mapping)
- 이익교환(trade-off)

라. 제도·문화의 평가

- 규제영향평가와 통합
- 활용 가능한 유인(incentive) 검토

마. 의사결정

- SWOT 분석
- 경제적 가치 환산(valuation): 개별 개발계획(project)에서 실행
- 정책 대안(option)들의 선별

바. 행동계획의 수립

- 시나리오 수립: 종합 일람표 작성 + 추진일정(time table) 수립
- 주체간 역할분담 + 모니터링 + 인식증진

4. 자연자본계정의 도입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정의(不正義)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비용이 자본계정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경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비용이 자본으로 계산되는 사례가 희귀하였다. 환경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편익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현행 국가재정체계가 ‘생산된 자본’ 즉 GDP 중심으로 편성·운용되고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개념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³⁵⁾ 개발 당국이나 사업자는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만을 자본으로 편입시키고 그 수익만을 계산하려 하였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기초는 바로 자연자본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자

35) 자연자본을 활용한 정부의 증진에 관한 세계은행의 권고에 관하여서는 황은주, *op.cit.*(2016), pp.24~30

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이다.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여 생태적 편익을 공유하려면 생물다양성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환경법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GDP를 규율하는 국가재정체계가 자연자본의 개념 및 계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자연자본

자연자본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광물, 에너지, 목재, 농지, 어류 및 물과 같은 자원 모두를 포함한다. 자연자본은 또한 공기나 수질 정화, 홍수보호, 탄소저장, 작물들의 수분(가루받이) 및 야생서식지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지 않는” 생태계서비스(자연의 혜택)를 포함한다. 자연자본의 가치는 시장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경제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가를 잘 모른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서비스들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상실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를 모른다.³⁶⁾

자연자본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GDP로 충분하지 아니한가?³⁷⁾ GDP는 1년 동안 생산된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의 가치를 측정한다. GDP는 경제활동 산출물의 일부만을 보고 장기적으로 소득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불완전하게 평가한다. GDP는 이러한 경제활동 산출물을 떠받치고 있는 부(副)를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국부회계(wealth accounting)로 불리는 방법론을 통하여 얻어진 국부의 전모는 건물이나 공장설비에서부터 하부구조, 인적·사회적 자본 및 자연자본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³⁸⁾

2) 자연자본계정

자연자본계정(Natural Capital Accounts : NCA)은 무엇인가? 각국이 유지하는 계정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관건이다. 자연자본계정은 숲·에너지 및 물과 같은 물질적 자연자원들에 관한 무편향(unbiased) 데이터 군이다. 자연자본계정은 환경경제체계라고 불리우는 UN통계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표준을 따른다. 각 국가들은 이미 국가 회계기준에 따라 자연자본계정에 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³⁹⁾ 이 데이터들은 어느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기

36)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What is natural capital?*

37)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 *Why does natural capital matter for economic growth? Isn't GDP enough?*

38) 황은주, op.cit.(2016), p.167

39)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What are natural capital accounts? How are they different from the accounts that countries keep now?*

술하고 GDP와, 무역균형이나 가계소비와 같이, 잘 알려진 다른 경제지표들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국가 회계기준은 생산경제영역에 제한되지만, 자연자본계정은 이를 넘어서서, 시장거래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자연 재화와 용역들을 계산한다.⁴⁰⁾ 전통적인 GDP를 넘어서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이다. 자연자본을 국가 회계기준에 편입시키는 것은 경제활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유도할 것이다.

3) 자연자본계정의 개발

국내총생산(GDP)은 생산된 소득(performance-income)의 일부만을 볼 뿐이고 이 소득의 저변에 놓여 있는 부와 자산에 관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그 광물을 개발할 때에는 실제 부를 고갈시킨다. 어류를 과도하게 잡거나 수자원의 질을 떨어뜨릴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감소하는 자산들은 GDP 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측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부(富)의 계정은 자연자본 계정을 포함하여 성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하다. 장기개발(long-term development)이란 제조된 자본(manufactured capital), 자연자본과 인적·사회적 자본(human and social capital)으로 구성된 운용자산(portfolio of assets)의 축적과정이고 건전한 경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회사는 수입과 대차대조표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상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만 의미를 두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⁴¹⁾

GDP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현저한 약점은 자연자본을 제한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이다. 숲·습지·농지와 같은 자연자본의 온전한 기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숲의 목재자원은 국가계정에 계상되지만 탄소축적이나 공기정화와 같은 숲의 다른 서비스들은 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GDP를 통해서만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복지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세계적으로 생태계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류복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자본이 총 국부(total wealth)에서 차지하는 현저한 비중(36%)을 감안할 때 자연자본은 핵

40) 탄소발자국과 생물학적 수용능력 평가에 근거한 국가 자연자본계정의 설치에 관한 상서는, C. Monfreda, M. Wackernagel, and D. Deumling, "Establishing national natural capital accounts based on detailed Ecological Footprint and biological capacity assessments", Land Use Policy 21(2004), pp.231-246

41) <http://www.worldbank.org/en/topic/environment/brief/environmental-economics-natural-capital-accounting: context>

심자산에 해당한다.⁴²⁾

자연자본계정 개념은 30년 이상 진전되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에서 채택된 의제21은 모든 국가들에게 통합환경경제회계 국가체계(national system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2년에 이르러 UN지속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는 사회·경제·환경 통합 통계·정보는...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⁴³⁾ 이러한 전망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UN환경경제계정체계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of the System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에 의하여 2012년 채택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지침은 광물·목재 및 어류와 같은 자연자원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⁴⁴⁾

4) 생태자연자본계정

자연자본은 종종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을 간과한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보전으로 방향을 돌리자면 의사결정자들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공급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물다양성을 측정체계에, 특히 국가회계(national accounting)에,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⁴⁵⁾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UN통계위원회 등이 2012년에 공동으로 작성한 SEEA-CF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자연자본회계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국가회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환경경제회계체계 실증편」(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Experimental Ecosystem Accounting: SEEA-EEA)을 추가로 발표하였다.⁴⁶⁾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2014년에 간행한 『생태자연자본계정: 촉진책』(Ecosystem Natural Capital Accounts: A Quick Start Package)(이하

42) *Ibid.*

43)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2012 Central Framework*, United Nations, New York, 2014, p.iii, Foreword

44) 황은주, op.cit.(2016), p.169

45) CBD Technical Series No.77 *Ecosystem Natural Capital Accounts: A Quick Start Package*, CBD, 2014, p.8 Foreword

46) 황은주, op.cit.(2016), p.175

“ENCA-QSP”라 약칭함)은 현재 또는 장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공동체의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의도로 자연적이건 인류활동으로 간접을 받았건 간에 모든 생태계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접근방법을 취한다.⁴⁷⁾ 이로서 ENCA-QSP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정량적 및 정성적 차원에서 망라하여⁴⁸⁾ 궁극적으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저하를 측정하고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건전한 생태적 관리를 통하여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⁴⁹⁾

제4절 개발도상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지원

1. 지원배경

1)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관점에서 이제 부자나라(富國)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개발도상국가(개도국) 사람들이 한류(韓流)로 널리 알려진 한국에 거는 기대나 꿈(Korean Dream)이 크다. 한국과 한국인은 OECD권의 선진국으로서 개도국들의 수요에 부응할 국제적 책무를 진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은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GDP를 일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021년 4월 현재 한국의 GDP 순위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국가별 GDP 순위⁵¹⁾

*전세계 GDP 총액 \$91.98조(Tn)

- | |
|---|
| 1) United States (GDP: 20.49 trillion) |
| 2) China (GDP: 13.4 trillion) |
| 3) Japan: (GDP: 4.97 trillion) |
| 4) Germany: (GDP: 4.00 trillion) |
| 5) United Kingdom: (GDP: 2.83 trillion) |

47) CBD, op.cit.(2014), p.8

48)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은 정책성 분석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등의 평가 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제35조제1항).

49) 황은주, op.cit.(2016), pp.176~177

50)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160804-will-this-be-the-happiest-place-in-the-world> : by Louise Redvers 5th August 2016: Here's why this country is upping its bid to become the cheeriest nation.

51)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countries-by-gdp> : GDP Ranked by Country 2021

5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 : IMF Download

- 6) France: (GDP: 2.78 trillion)
- 7) India: (GDP: 2.72 trillion)
- 8) Italy: (GDP: 2.07 trillion)
- 9) Brazil: (GDP: 1.87 trillion)
- 10) Canada: (GDP: 1.71 trillion)
- 11) South Korea⁵²⁾ (GDP:1.63 trillion)

*자료: 외교부 유엔과 「2020년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2) 한국의 국제기구분담금 비율

한국은 UN과 그 전문기구 및 산하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수준에 어울리게 높게 부담한다. 한국의 UN 정규예산 분담률(2019년~2021년)은 미국(22.000%), 중국(12.005%), 일본(8.564%), 독일(6.090%), 영국(4.567%), 프랑스(4.427%), 이태리(3.307%), 브라질(2.948%), 캐나다(2.734%), 러시아(2.405%)에 이어 2.267%로서 11위를 기록한다. 한국은 레바논평화유지군(280명), 남수단임무단(278명) 및 인도·파키스탄정전감시단(7명) 등 총580명의 UN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에 조금 더 많은 금액(96백만달러)을 출연하여⁵³⁾ 2019년~2021년 기준 주요국가중 미국(27.880%), 중국(15.214%), 일본(8.564%), 독일(6.090%), 영국(5.788%), 프랑스(5.610%), 이태리(3.307%), 러시아(3.048%), 캐나다(2.734%)에 이어 10위(2.26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⁵⁴⁾에 힘입어 평화유지활동에 UN 정규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있었다.

3) 국제개발협력

의무적이거나 거의 의무에 가까운 국제기구나 UN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금과 달리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이다. 국제개발협력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기타자금 지원이 있다. 공적개발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한국은행은 2018년 한국의 GDP를 1조 7,208억 달러로 집계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IMF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GDP가 감소하는 추세(2018년 1.725Tn→2019년 1.646Tn→2020년 1.630Tn)를 보여 캐나다와 순위가 바뀌었다.

53)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496: 외교부 유엔과, 「우리나라의 UN PKO 참여 현황」 (2020년 1월 현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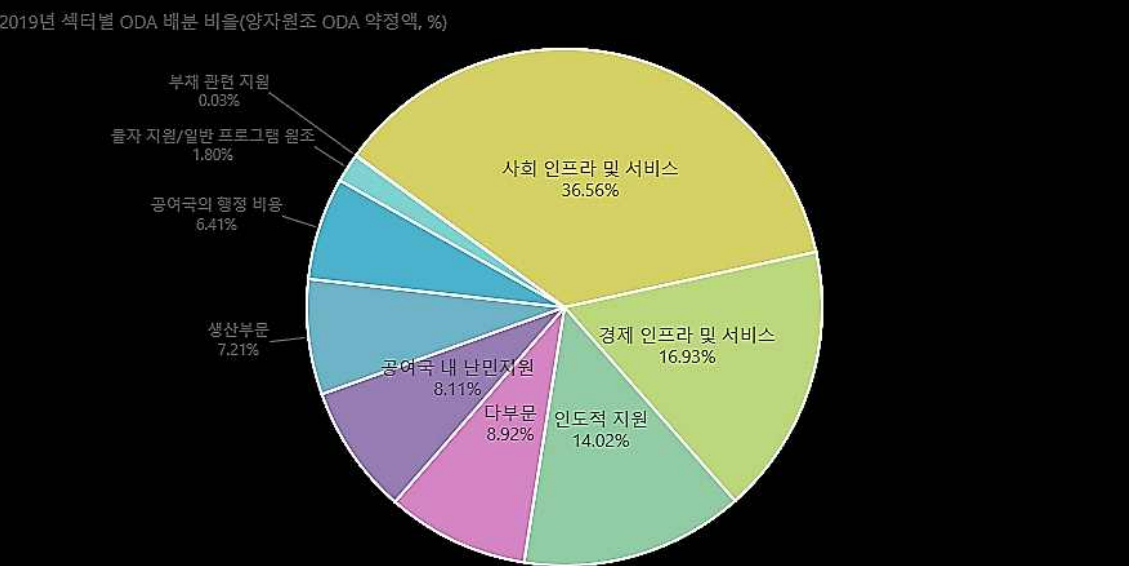
54) UN 평화유지활동법 [시행 2010. 4. 26.] [법률 제9939호, 2010. 1. 25., 제정]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된다.⁵⁵⁾

구 분	예산액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73백만달러
유엔 PKO예산 분담금	96백만달러
기타 의무분담금 (UNIDO, OECD, IAEA 등 유엔 기구 및 정부간 기구 회원국 및 국제협약 당사국 자격으로 납부)	57백만달러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UNDP, UNICEF, UNHCR 등 유엔 산하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	132백만달러

4) 선진국들의 ODA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9년 33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이다. 다음으로는 241억 달러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독일에 이어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원조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로, 29개(EU 제외, EU포함 30개)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⁵⁶⁾



55)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로 볼 때,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UN의 권고치인 0.7%를 초과 달성하여 경제수준 대비 높은 ODA 비율을 보인다.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9년 기준 0.38%로 UN 권고 비율의 절반을 밑돌아,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UN 권고 비율보다 낮은 2019년 0.15%를 기록하였다.⁵⁷⁾

5) 일본의 ODA 수준

일본의 ODA 수준은 종종 국제적 비교의 대상이 된다.⁵⁸⁾ 일본의 ODA 금액은 2018년 현재 약\$14,163백만(Grant Equivalent System 기준)으로서 DAC 회원국 중 미국, 독일 및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28%로서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였다.⁵⁹⁾ OECD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일본은 약\$16,300백만을 ODA에 지출하여 GNI의 0.31%를 기록하였다. 그중 \$769백만은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투자에 지출되었다.⁶⁰⁾

6) 소 결

한국은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에서는 GDP에 어울리는 수준을 유지하지만 자발적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떨어진다. 한국의 일부 NGO와 기업은 사막에 나무심기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⁶¹⁾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을 자사가 설립한 국내재단에 출연하여 자선활동을 수행하고 자금이 내부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사회적책임(CSR)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공유가치창조(CSV)로 나아가기 어렵다.

한국사회가 국제개발협력등 자선활동에 소극적임은 전반적인 기부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세계나눔지수(World Giving

56)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4_S01_01.jsp

57) Ibid.

58) 예컨대, 박환표, “한국과 일본의 ODA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2019년11월) 논문집, pp.107~108

59) <https://www.mofa.go.jp/files/100161529.pdf> :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9 :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 Building a better future by connecting the world (March 2020)

60)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8cf3944-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b8cf3944-en>

61) 푸른아시아(社), “나무심기 20년, 몽골사막에 희망을 쏘다”. 조선일보 2019.10.24. ; 몽골에 '숲' 만든 사연 <https://www.yuhan-kimberly.co.kr/Newsroom/YkstoryView/879>

Index) 보고서(2020.5.4.)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기부지수 점수는 34%, 순위로는 126개국 중 38위였다. 이는 갤럽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전월에 기부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다. 한국과 기부지수 점수가 비슷한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35%), 파라과이(34%), 레바논(33%) 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20위였다. 칠레(44%)나 슬로베니아(3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⁶²⁾

2.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제협력

1) 국제협력의 새로운 목표: 지속가능발전

2015년 7월 유엔 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행이 2016년 1월 1일 시작되었다.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목표들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되는 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힘을 예정이다.⁶³⁾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SDGs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쓰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⁶⁴⁾

SDGs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정부는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의식 있는 국가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목표 이행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전상황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질, 접근성 및 시의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한다.⁶⁵⁾

2) 자선활동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자선활동은 전쟁과 난민 그리고 기아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강세를 보인다. 정부에 의한 국제기구분담금의 상당액은 여기에 지출된다. 국제 NGO들의 활동도 그렇다. 그 결과 우선 급하지 않아 보이는 환경에 대한 자선은 언제나 후순위에 선다. 그러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62) 연합뉴스 2020.5.4.

63) <https://un-rok.org/ko>

64) Ibid.

65) Ibid.

표방하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위생의 개선은 우선의 자선이 아닌 장기적인 개발지원과 역량강화를 필요로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부족한 개발자금을 빌리려 동분서주하는 대신에 풍부한 자연자본을 기반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활용하여 국부를 증진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외부세계의 상상을 초월하여 망가지거나 오염된 환경과 생태를 복원시켜야 한다. 모든 UN 기구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립(2016.1.1.)을 계기로 각각의 기본전략을 모두 수정하였음에도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생태계 붕괴와 환경오염 그리고 생물다양성 손실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설혹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역량부족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완수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ODA나 민간협력을 통하여 개도국들을 도울 수 있는 핵심 방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의 지원이다.

3) UN지속가능발전센터의 지원

UN 기구들 중에서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는 개도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구이다.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UNOSD는 UN 회원국들이 통합된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환을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다. UNOSD는 개도국들의 정책결정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배양, 지식개발 및 공유, 정책지원 활동을 통하여⁶⁶⁾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UNOSD는 UN경제사회국(DESA)의 부속 사무소로서, 한국 환경부, 인천광역시와 연세대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UNOSD에 적용되는 기본계획⁶⁷⁾(Framework Plan)에 따르면, UNOSD의 연간 운영예산은 평균 2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UNOSD는 한국 정부내 이해당사자,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매년 약 240만 달러의 출연금을 받았다. 조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UNOSD의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활동계획은 1년간 전년도에서 이월된 \$485,000를 포함하여 총\$3,322,000의 예산을 세웠다.⁶⁸⁾ UNOSD 신탁기금계약(trust fund agreement)은 6개의 핵심사업인력[one D-1; two P-5; one

66) <https://unosd.un.org/content/about>

67) The Framework Plan on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0-2020

68) Evaluation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DESA, Last revised on: 5.6.2020), [A] Background 7.

P-4; one G-5; and one G-4.]을 규정한다.⁶⁹⁾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와 수준의 향상

UN 국제기구들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내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는 ODA 수준에 비추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과 그 역량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환경부는 산하 기관들을 통하여 환경부문 국제협력을 실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식공유프로그램(KSP)에 비하여 체계성이 떨어진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 산하기관들의 기본전략들에서 보듯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과 접점을 맺고 있으며 모든 부처들이 각각의 업무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체화시켜야 함에도 우리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업무영역에 치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소극적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역량강화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수준[인력과 재원]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적개발원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역량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지원하는 UNOSD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협력하여 역무를 대행할 수 있는 NPO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재정당국이 한정된 재원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의 변화를 설득하고 필요하면 ODA를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6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perationalization of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gned on 8 December 2010, Annex I. Framework Plan, p.8

제6장 남북환경협력 이바지: DMZ를 기반으로

제1절 남북의 법률관계

1. 정전협정체계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 내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통행과 접근을 금지한 한국군사정전협정⁷⁰⁾에서 정한 규범체계를 따라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쌍방 군최고사령관의 관할을 받는다. 다만, 바다에서는 “비무장지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분계선 부근의 한강 하류는 무해통항의 원칙을 적용하며 분쟁이 잦은 연해도서(서해5도)는 ‘선’(line)의 개념이 아닌 ‘점’(dot)의 개념으로 규율된다.

1) 정전협정의 적용범위

이 협정은 군사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는 “(협정의)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는 협정 ‘서언’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이 협정은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⁷¹⁾ 환경사무도 넓은 의미에서 민사에 속한다. 그러나 교전 쌍방이 아닌 국제기구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BR) 등의 선정/지정은 군사적 성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민사행정’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2) 공간의 획정: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조제1항). 군사분계선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 지역 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70)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10시 작성 / 같은 날 22시 발효(협정의 서명 당사자: 국제연합군총사령관:미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팡덕희)

71) 비무장지대 남측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UN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북측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협정 제2조제10호).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서는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

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지물의 건립을 감독한다(정전협정 제1조제4항).

3)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 : 군사분계선 통과 및 출입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제7항).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제8항).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제9항).

4) 군최고사령관들의 관할 : 군사분계선 이남/이북 민사행정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 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정전협정 제1조제10항).

5) 민간자유항행 : 한강하구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제5항).

6) 거점별 관할 : 연해도서

연해도서중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 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로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정전협정 제2조제13항ㄴ목).

2. 남북기본합의서

남한과 북한은 분단 국가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관할권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기본합의서 제5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기본합의서 제11조).

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기본합의서 제12조).

3) 남북 환경·문화 협력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기본합의서 제16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기본합의서 제19조).

4) 남북공동위원회 환경·문화 분과위원회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기본합의서 제22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기본합의서 제23조).

제2절 자연유보지역

1. 비무장지대의 법적지위

‘공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람들의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세계평화공원’ 설치에 관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물론 정전협정 체결 이후 UN군과 조선인민군은 추가합의 사항(제29항)으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거점’ 수준에 머문다. ‘면’으로 접근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토지이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비무장지대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비무장지대를 생태네트워크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자연유보지역’(nature reserve)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비무장지대(남측)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제22조)이 아니다. 동법은 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날부터 2년 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구역으로 본다는 정의조항(제2조제13호)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현재 법적 보호에 장애를 겪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면 사유재산권 주장이 가능한 남북통일 후 시점에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남북통일 이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를 현재 단계에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없어 질서가 문란한 토지들의 법적지위를 안정화시키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사유지들을 공유화하는 국민신탁(trust)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여전히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UN군총사령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정전협정이 금지하는 군사나 민사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자연유보지역과 같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보전함은 비무장지대 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기 때

문에 UN군총사령관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물론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는 비무장지대(남측) 안의 일정한 거점에 생태평화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토지이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UN군총사령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자연유보지역 내에서는 토지이용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연유보지역의 관리현황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자연유보지역”은 “무인도”와 “비무장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서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무인도 자연유보지역은 어느 일면으로 비무장지대 때문에 묻혀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통일 후”라는 정지조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유보지역도 아니다. 법률상 사각지대에 묻혀 있는 비무장지대를 생물권지역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라는 개념을 계속 쓸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demilitarized)은 그 목적이 ‘휴전’이 아니라 ‘평화’(peace)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제법상으로는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국내법상 표현에서는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을 ‘평화지대’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상 ‘자연유보지역’이라는 용어정의를 “무인도 생물권지역”과 “비무장지대 생물권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비무장지대 생물권지역은 남측(south) 구간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책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에 군사정전협정의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도인 자연유보지역이 법령상 구체화되지 아니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인도’와 ‘비무장지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연유보지역’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되 “통일후”라는 정지조건만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연유보지역의 법적지위 개선안

자연환경보전법상 정의(제2조) 규정을 정비하여 비무장지대를 “통일 후 2년 이내”라는 정지조건 없이 현행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비무장지대가 바로 생물권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무장지대는 자연유보지역으로서 현행성을 갖출 경우에 유네스코 규약이 요구하는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고 따라서 향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현행법 제2조제13호 “자연유보지역”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규정한 ‘정지조건’ 구절을 삭제하여 법 개정과 동시에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이 성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물권지역은 신청 이전에 국내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규율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은 비무장지대를 남측 구간과 북측 구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어려움을 낳을 수 있어 법 개정안에서는 남측 구간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무장지대 일원을 규율하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제2조제13호)의 “통일후 2년간”에 해당하는 정지조건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을 삭제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법률 제2조제13호.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법률개정안 제2조제13호.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제3절 DMZ의 미래전망

1. 접경지역에 부는 개발바람

1953년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66년 동안 가끔 남북 인사들이 왕래하였고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하였으나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상징하는 철조망은 여전히 굳건하고, DMZ와 민통선을 지키는 군비나 병력도 감축되었다는 보도가 없다.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도 우호와 적대사이를 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조만간 DMZ가 모종의 국부의 원천이 될 것으로 믿는다. 어느 방송사와 자동차회사가 DMZ를 배경으로 광고 방송을 촬영하다가 국방부의 불허로 중단된 사례가 시사하듯이,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오지로 두었다가 ‘뽕튀기’(압축팽창) 방식으로 개발하건,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도모하건 간에

DMZ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DMZ 일원(민북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다)에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한다.⁷²⁾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1) 관광 부문에서 108개 사업에 3.0조 원을 써서 ①DMZ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고 ②한탄강변에 주상절리길(연천·포천·철원구간 119km)을 내며 ③양구에 편치볼 하늘길(곤돌라·전망대·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제에 병영체험공간(서바이벌게임·사격체험존)을 만든다. (2) 생활 SOC 부문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42개 사업에 1.7조 원을 투입하여 ①강화에서 고성까지 권역별 거점 10개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민군 공동이용 문화·체육·복지시설)를 열고 ②LPG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한다. (3)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54개 사업에 3.4조 원을 지출하여 ①연천에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②화천에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며 ③고양에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건설한다. (4)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서 21개 사업에 5.1조 원을 지원하여 ①웅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왕복2차로)를 건설하고 ②(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남북문화체험관)를 개설한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사업들은 DMZ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아직 없다. 하지만 영종-신도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 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DMZ 아래 민북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남북교류를 겨냥하고 있어, DMZ에 대한 잠재적 개발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별도로, 1조원이 투입되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과 9천억원이 들어가는 제2 경춘국도(남양주-춘천)도 북으로의 진출을 예고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DMZ를 단절하는 도로·철도·케이블카·송전선로·송유관 등 경제통로들은 이것들뿐만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원선뿐만 아니라 복원과 연장을 추진 중인 동해북부선(강릉-속초-제진-감호-외금강-원산)은 동해안의 DMZ를 관통한다. 경의선(서울-문산-개성-평양)이 복원되면 DMZ 서부를 관통한다. 이 사업들이 모두 성사되면, DMZ는 동서남북으로 갈갈이 찢어진다. 이는 한반도 3대 생태축인 DMZ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2. 생태자원화

“지구 생태계는 분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관점에서 방대한 유라시아 생

72) <https://www.mois.go.kr> [2019.2.7. 보도자료]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추진”, 참조

태 네트워크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생태자원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생태자원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세계은행(WB) 등이 권장하는 생태자원화는 자연자원을 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보전·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화에서는 특정한 곳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개발하는 ‘점’(點)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동통로라는 차원에서 동서와 남북을 연결시키는 ‘면’(面)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와 관련하여서는 종래 생태평화공원, 국립공원,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또는 생태통로와 같은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다. 이 중 평화공원 구상은 비무장지대가 처한 법률적 제약 때문에 “특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발상을 기초로 한다. 여기에 비하여 국립공원화나 생물권보전지역 또는 생태통로화 구상은 비무장지대 전역 또는 대부분의 구간을 생태적 공간으로 보전한다는 발상을 기초로 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에 설정할 생태적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다.

어떠한 구상과 방법에 의하여 비무장지대 공간을 보전하거나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법률적 접근방법이다.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1조제8호).

민통선(CCZ)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생태자원화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접근경로에 대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한다. 생태공원이나 생태평화공원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공중의 출입과 자원의 향유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역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한다.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에만 이러한 공원을 창설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UN군총사령관의 승인만 얻으면 될 것이다.

3. 전후 질서의 재편과 DMZ 내부토지 질서의 안정화

DMZ 일원을 누비면서 남북으로 뻗어나갈 경제통로와 더불어 DMZ 생태축을 파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DMZ 내부와 민북지역에 위치한 토지들에 대한 개발압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장차 통일이 이룩되면, 통일 독일처럼 “DMZ 일원의 구(舊)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를

개발에 넣겠다”는 꿈을 꾀다. 오랜 세월 동안 장롱 속에 들어있던 DMZ 내부의 옛날 토지문서들이 부동산 업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38선 이남의 강원도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의 토지 소유권 분포로 미루어 한국전쟁 전 DMZ 내부에도 적지 아니한 사유지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유지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종전 소유자들이나 이들로부터 문서를 양도받은 사람들은 현재는 UN군이 행사하는 DMZ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에 옛 토지 질서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연구와 발표⁷³⁾에 따르면, 이러한 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독일의 사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DMZ가 같은 경로를 밟은 것으로 기대하지만 흡수통일은 여러 시나리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통일이나 관할권 이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건 간에 옛 토지 질서의 온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전쟁은 혁명처럼 힘(무력)에 의하여 초래된 사실관계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압도하고 변경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혁명을 겪은 국가들이 예외 없이 사유 토지를 모두 국가에 귀속시켰었고, 힘에 의한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종전의 헌법체계를 유월하고 새로운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면, 전쟁에 의한 토지 질서의 재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토지 질서가 아직도 동요를 겪고 있는 저간의 사정이나, 1991년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소비에트에 속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4개국의 현황을 보면, 전후에 또는 구체제 붕괴 후에 옛 토지 질서가 고스란히 복원되기란 지난한 일이다. 전후의 경우에는 점령국이나 전쟁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국제법에 따라 전체 토지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민법 질서에 기반한 옛 토지 질서의 복원은 백년하청이 되기 쉽다.

4. DMZ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안

DMZ 일원에 개발의 바람이 불지만, DMZ가 한반도 유일의 동서 생태축이며, 전후 토지 질서가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민법 질서의 원용만으로 재편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DMZ를 정의(justice)의 원리에 따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의 변화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DMZ 일원의 개발을 염려함은 경제통로를 가로막자는 뜻이 결코 아

73) OBS 경인TV 초대석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이사” (2019.7.20.방영)
<http://vod.obs.co.kr/program/invi/invi-38.mp4>

니다. 경제통로가 DMZ를 관통하더라도 생태통로를 자르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경제통로가 DMZ 생태축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DMZ를 기반으로 남북이 지속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DMZ 일원에서 경제통로와 생태통로의 교차와 공존은 두 통로의 교차 원칙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준칙⁷⁴⁾을 원용하면, 예컨대, 경제통로가 공중이나 지하로 DMZ를 관통하면 생태축 훼손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경제통로와 생태통로의 교차만으로 DMZ가 당면한 토지 질서의 각축이나 개발압력이 사라지는 아니한다. 보다 근원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어떤 대안이 있는가? 법률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신기원을 여는 접근방안⁷⁵⁾이 있다.

이 방안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기반한 접근을 전제로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구상을 골격으로 한다: (1) 남북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DMZ 전역이 영구 중립지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2) DMZ 내부의 토지는 공유수면처럼 ‘공유지’로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자연유보지역) 규정을 고쳐 자연유보지역으로 현재화시켜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DMZ 일원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및 방침을 세울 수 있다(법 제22조). DMZ 일원의 토지질서를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DMZ를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DMZ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엄격하게 보전함은 냉전시대 철조망 너머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DMZ는 전쟁과 그 후의 무력대치로 인한 인위적 개입이 상존하였기 때문에 울타리는 외려 생태적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DMZ 일원의 자연혜택, 즉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를 활용하면 환경도 지키고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한다”는 방안⁷⁶⁾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DMZ의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끌어야 한다. DMZ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및 경관이, 흔히 오해하는 바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훼손된 곳일지라도 산림과 산악에서부터 초지와 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군계(biome)를 형성하고 있어 생태계서비스의 보고이

74) 자연공원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75) 황은주, “중립적 공유지에 기반한 DMZ 토지질서의 안정화”, DMZ평화경제국제포럼 자료집(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8.29.) 제4절, 발췌·요약

76) 황은주, 박사학위논문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이익공유 법리연구』(서강대학교: 2016), 제3장 합의모형에 따른 이익공유, 참조

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출하지만 별개의 자산이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본원자본이라면 생태계서비스는 파생자본이다. 지역주민들은 토목·건축 일변도를 넘어 **DMZ**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유출되는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DMZ**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도시의 소비자들은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임산물과 같은 공급서비스를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합의에 따라, 남측은 북측이 조성하거나 제공하는 산림자원이나 물과 같은 생태계서비스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4절 남북환경협력 제안

1. 개 요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일원을 경관·전통농법·생물다양성·문화유산·파트너십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농업유산 내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보상(PES)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유산(WH), 생물권보전지역(BR), 생태관광, 도농교류 및 남북협력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

2. 이 념

남북평화에 기반을 둔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ESSD)

3. 목 표

- 1) **DMZ** 일원 생태계의 보전·가치개발 및 상표화(band개발)
- 2) 자연혜택(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의 공정하고 공평한 향유
- 3) 민통선(CCZ) 내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4) 남북 경제·환경 협력의 기반 구축
- 5) 야생과 인류의 공존

4. 프로젝트 구성

- 1) 생물권보전지역화, 세계농업유산화 및 세계유산화
- 2) 생태계서비스 지도작성·계정설정 및 구매
- 3) 농생태학(agroecology) 기반 생물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 4) 탄소상쇄[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제도화
- 5) 남북간·남남간 생태·문화관광을 통한 도농교류 및 특산품구매

6) 멸종위기종[예: DMZ 12띠] 서식지 보전: “땅1평 저축 운동”

5. 사업내용

- 1) DMZ 관련 관계 행정기관들의 계획과 협력을 기반으로 삼아
- 2) DMZ 일원을 UNESCO 생물권지역, FAO 농업유산지역 내지 UNESCO 세계유산(WH) 등으로 권역화[에코벨트화]하고
- 3) 생태계서비스와 생물자원·산림자원과 같은 잠재적 가치를 현재화하여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시키고
- 4) 경제주체[기업+개인]들에게 구체적인 참여유인[브랜드 가치증진 + 소득창출]을 제공하며
- 5)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기부를 통하여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를 확보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들의 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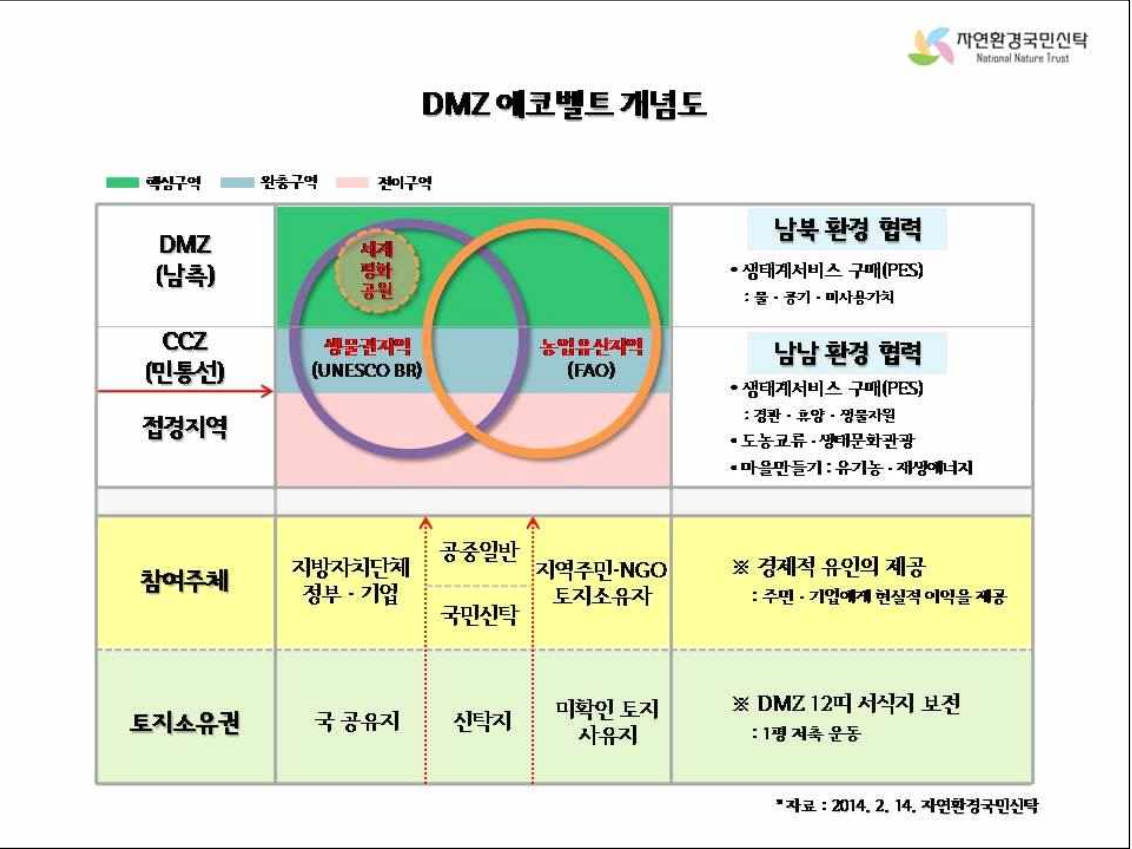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들의 행정계획·사업계획 등에 ‘에코 DMZ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킨다:

- ①환경부·국립생태원: 생물권지역화, 생태계서비스 지도작성·계정설정,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생태관광
- ②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농업유산화 및 도농교류 지원
- ③산림청: 숲가꾸기 및 산림탄소상쇄
- ④문화관광부·문화재청: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 보전
- ⑤안전행정부: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만들기
- ⑥국토교통부: 지적조사 및 정비
- ⑦통일부: 남북교류·협력
- ⑧기획재정부: 생태계서비스 공여자들과 수혜자들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의 차등화
- ⑨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력

2)권역별 공간의 디자인: 에코벨트화

①생물권지역화: 환경부·경기도·강원도 및 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DMZ(남측)와 민통선 일원을 UNESCO 생물권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재추진. 생물권지역의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통일후 2년 이내”로 묶여있는 DMZ ‘자연유보지역’을 현재화시킨다.

②농업유산지역화: 고유한 자산 내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내 지방자치 단체들이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DMZ와 민통선 전역을 국가농업유산지역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FAO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3) 자연자원의 가치개발

①생태계서비스 개발: (a) DMZ 일원이 제공하는 경관·물·공기·생물자원·휴양 등의 편익(service)을 계량화·도면화하여 가치를 현재화시키고 편익 중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증서로 표창하여 그동안 같은 편익을 무상으로 누렸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다. (b) 서비스증서 구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지소유자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귀속시킨다. (c) 서비스 증서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그 상품·서비스에 인증표시를 부여하여 기업의 상표(brand)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한다 (d)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북측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공기·생물자원과 같은 서비스를 남측(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②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a) **DMZ** 일원에 부존된 생물자원을 전통지식과 함께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장기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b) 생물자원중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산업화·재산화시켜 지역주민들 또는 토지소유주들의 소득으로 전환시킨다 (c) 생물자원의 산업화 또는 지식재산권화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

③산림자원의 보전 및 활용: (a) **DMZ** 일원의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는 교두보로 활용한다 (b) 숲에서 확보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서[흡수권]로 표창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에 상장한다 (c)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부산물 또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다.

4) 경제주체들에 대한 참여유인의 부여

①개인에 대한 유인의 제공: (a)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자 등이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에코 **DMZ** 프로젝트’로부터 현실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에 따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b) **DMZ** 일원이 생물권지역이나 농업유산지역으로 등재되면 그 자체가 상표[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며,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 생물자원·산림자원의 활용, 생태문화관광 또는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사업기회,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의 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함을 적시한다.

②기업에 대한 유인의 제공: (a) 국내외 환경친화적인 기업들로 하여금 **DMZ** 일원의 자연환경이나 야생 서식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기부나 후원을 지양하고 에코 **DMZ** 프로젝트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공헌활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b) ‘에코 **DMZ**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인증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생물자원 또는 산림자원 등에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5) 야생 서식지 보전

①보전 대상 서식지의 확보: 환경과학원·산림과학원·수산과학원 등의 협력을 얻어 **DMZ** 일원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멸종위기종[**DMZ 12띠**]을 파악하고 이들의 평화로운 생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식지를 선정하여 해당 ‘생물종의 땅’ [예컨대 ‘두루미네 땅’]으로 선언하고 그 중에 포함된 사유지들

의 기부를 유도하며, 기부가 곤란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보전협약을 맺는다.

②인터넷을 통한 홍보: 보전 대상 서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는 에코 DMZ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에게 야생들의 위가와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각자의 이름을 현명한 “땅1평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모아 해당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조금씩 매입하거나 같은 서식지에 대한 보전협약을 체결한다.

6. 참여주체 및 역할분담

1)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①경관, 생태계, 야생서식지, 생물·산림·문화 자원등의 보전에 협력

②에코 DMZ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모색

[예1] 개인이나 기업에게 역내 생태계의 서비스를 판매

[예2]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정부나 기업에 제공

[예3] 숲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기회를 개인·기업에 제공

[예4] 생태문화관광·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예5]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특산물을 판매

③에코 DMZ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가

2) 시민사회단체(NGO)

①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소통 ; 지역사회의 조직화

②에코 DMZ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③에코 DMZ 프로젝트 사업의 공동주관 또는 대행

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강원도·DMZ 일원 7개군 및 인천시

①지역주민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과의 소통

②에코 DMZ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부분 사업들의 발의·주관

③에코 DMZ 프로젝트를 지속발전계획·지방의제 등에 반영

④지역을 특화하는 상표(brand)·고안(design) 등을 개발

4) 대학 및 연구기관

①권역별 공간[생물권·농업유산]의 획정·구성

②생태계서비스 등 잠재적 자연자원들의 가치를 개발

③자연자원이 주는 경제적 이익의 산정

④야생 및 서식지의 보전방안 연구

5) 환경친화적 기업

①지속가능경영활동과 에코 **DMZ**프로젝트의 접점[관련성] 분석

②참여나 구매가 가능한 **DMZ** (개별) 프로그램의 선정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DMZ** 프로그램 예시

(a)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구매

(b)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c) 산림탄소상쇄[숲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체계] 참가

(d) 고객이나 사원들에게 지역특산물 구매를 중개

③자사 브랜드·디자인에 활용가능한 환경인증 방법의 강구

※에코시스템서비스 구매표지를 기업 상품·서비스에 부착

[예] ○○은행 ‘이벤트’ 화면에 에코시스템서비스 구매홍보

6) 언론사: 전국언론사·지역언론사·포털

①독자에게 감동을 전하는 스토리텔링의 개발·공모

②에코 **DMZ** 프로젝트 참가를 권유하는 캠페인의 공동주관

③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기회에 공동참가

7)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①해당 행정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에코 **DMZ** 프로젝트를 반영

②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과의 소통·협력

③국민신탁과 같은 기반(platform) 조직에 대외 공신력을 부여

④에코 **DMZ**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행정지도 및 평가

⑤국제기구들과의 교섭

8) 국제기구: UN사령부·UNESCO·FAO·IUCN 등

①UN사령부: 군사정전협정을 환경친화적으로 해석·적용

②UNESCO: 남북환경 협력을 위한 대북교섭을 지원

③FAO: 세계농업유산 등재에서 **DMZ**에 대한 우선적 고려

④IUCN: 자연기반해법(NbS)을 지원

9) IUCN한국위원회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①에코 **DMZ** 프로젝트의 공동기획

②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NGO등과의 교섭

③주민설명회·기업설명회의 개최 및 언론홍보

④에코 **DMZ** 프로젝트의 실행

⑤행정기관 또는 프로젝트 참여주체들로부터의 위탁사무 수행

7. 추진단계 및 절차

1) 준비단계

- 예비조사 ☞ 참여 주체별 이익형량
- 초안작성 ☞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협의
- 지자체 방문 및 주민교섭 ☞ 설명회
- 권역별 잠재자원[地域力] 조사 ☞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 생물권·농업유산지역 공간 디자인 ☞ BR & 농업 TF
- 야생[DMZ 12띠] 서식지 선정
- 생태계 가치평가, 도면작성 및 계정화 ☞ PES TF
- 활용가능 상품·서비스의 선정 ☞ 상표[브랜드] 형성
- 참여유인 모색 ☞ 파트너 기업 선정

2) 실행단계

- 에코 DMZ 프로젝트 종합계획의 수립
- 대중인식 증진 ☞ 언론사·SNS 등
- 보전 및 복원 활동
- 현명한 이용방안 정립
- 상품·서비스 홍보 ☞ 생태계서비스권[證書] 발행
- 약정체결: 개인·기업·지자체·국민신탁 등
- 에코 DMZ 프로젝트 개별사업들의 실행
- 국가농업유산 등재신청
- 세계농업유산 등재신청

3) Feedback

- 이해당사자 협의 및 조정 [Round table]
- 사업평가 ☞ 정산 ☞ 공평한 이익분배
- 관계 행정기관들의 차기 행정계획에 반영
- 자연환경보전법상 DMZ 종합계획 내지 국민신탁 사업계획등에 반영

제7장 맺 음 말

제1절 조직 및 기능 활성화

1. 전문위원회 구성

- 교육소통위원회(CEC)
- 생태계관리위원회(CEM)
- 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CEESP)
- 생물종유지위원회(SSC)
- 한국환경법위원회(KCEL)
- 한국보호구역위원회(KCPA)

2. 포럼의 운영

- 협력포럼 : 6개 전문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 참가
- 청년환경포럼(Youth Environmental Forum)

3.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

- 환경정보·자료 아카이브 구축
- 주제별 Task Force 팀 구성
- 회원기관 기반 정기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제2절 국제화

1. 국제협력 활동

4년마다 개최되는 IUCN 총회에 참석하는 활동만으로는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 IUCN 유럽국가위원회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UCN한국위원회도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서비스 체계화 등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연환경자산의 개발과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2006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생산된 자본(produced capital)과 사회자본이 부족하여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다. 코리안 드림 내지 한류의 발달은 이러한 동향을 뒷받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IUCN한국위원회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한 제주도가 종래 운영중인 리더스보전포럼을 지원할 수도 있다. 리더스보전포럼은 자연보전총회 사이에 개최되어 특성화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포럼이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에 그치거나, 포럼에서 공유한 경험이나 결의한 내용들이 확산·집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진다. 리더스보전포럼은 제주의 생태와 경관을 자산으로 운영되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경우 유인이 떨어지며 다른 국가들을 순회할 경우에 우리 정부와 제주도가 개최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IUCN한국위원회는 리더스보전포럼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매회 각각의 참가자들이 리더스보전포럼에 와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론을 익히고 재정적 지원과 연동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여 포럼의 지속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환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 발굴

국제기구와 EU등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관계 당국 또는 전문기관 등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이 드러난다. IUCN한국위원회가 경우에 따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해당 간행물들을 조사·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과 방법론 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UCN한국위원회가 IUCN이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하여 국내 관계기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보전 이익을 GDP에 반영하는 생태자연자본계정의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생태계서비스평가제
-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을 돕는 농생태학(Agro-ecology) 원리와 방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 전략
- 탄소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호환
- EU 녹색복원 정책 및 법제의 시사점
-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국부의 증진
- 탈(脫)플라스틱 사회 형성 전략

제3절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

1.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권고

UN은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하고 새천년과 함께 새천년발전목표

(MDGs)를 추진한 이후 다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립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이행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그리고 지역의 몫이다. UN경제사회국이 간행한 요람[UN 세계사회보고서 2021: 지방발전의 재고]은 21세기를 향하여 지구차원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틀을 재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의 경제체계를 전환시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⁷⁷⁾, 이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경로를 제안한다.⁷⁸⁾ 세계사회보고서 2021은 우리 정책에 특히 환경정책에 적극 도입할만한 비전과 방법론을 담고 있다.

IUCN이 추구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과 생태계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원리를 문명사회에 원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시켜 인류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로, 즉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산업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도 포함한다. 예컨대, 전시대에는 수요자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그물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지 않고 또 나무를 베지 않고 살려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

2. 역무대행기구와 IUCN한국위원회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공유하고 실천함에는 UNOSD의 목표나 사명에 호응하여 국내적으로 또는 각 지방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무대행기구[NPO 내지 NGO]들이 필요하다.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국민신탁은 법률상 ‘국민’(national)에 기속된다. 개발도상국가들에 국민신탁과 같은 역할을 공유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국내 NPO가 필요하다. 국내 NGO로서 UNEP한국위원회(社)가 활동한다. 이는 청소년 환경교육을 중시한다. 국내 NPO로서 국제환경협력에 참여하는 기구로서는 UNESCO 한국위원회, UNESCO 인간과생물권(MAB) 한국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과학·문화 차원의 폭넓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후자는 생물권보호지역(biosphere reserve)이라는 보호구역 관리에 특화되었다. 모든 기구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나름대로 이바지하지만 자연기반해법이라든지 역량

77) The World Social Report 2021: Reconsidering Rural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21), pp.18~21

78) Ibid., p.143 & p.145

강화를 지원하지는 아니한다.

IUCN 한국위원회는 세계본부의 위상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개도국들의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특별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앞에서⁷⁹⁾ 살펴본 바와 같이, IUCN 프랑스위원회, 동 영국위원회 또는 동 네덜란드위원회의 활동사례에서 읽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IUCN 프랑스위원회를 역무대행기관[파트너]으로 인정하고 과격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위원회는 습지[이탄지대]의 탄소고정을 위하여 신탁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한다. IUCN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79) 본보고서 제2장 제4절 주요 국가위원회들의 활동, 참조

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및 논문 등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에도 세금이 있다?...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22.)
- 자연환경국민신탁, 『생태관광진흥법(가칭)제정방안연구』 (환경부: 2020.12.7.)
- 박환표, “한국과 일본의 ODA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2019년11월) 논문집
- 황은주, “중립적 공유지에 기반한 DMZ 토지질서의 안정화”, DMZ평화경제 국제포럼 자료집(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8.29.)
- 황은주,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이익공유 법리 연구: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 통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Press Kit(2012.7.)
- National Nature Trust, *Skills and Experiences of Cooperation through National Trust, TEXT BOOK: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2012 of the IUCN, Jeju, Korea*

□ 국외 단행본 및 논문 등

- 기후·공동체·생물다양성표준(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CCBS)
- Amanda Briney, An Introduction to Ecotourism (2020)
- C. Monfreda, M. Wackernagel, and D. Deumling, “Establishing national natural capital accounts based on detailed Ecological Footprint and biological capacity assessments”, Land Use Policy 21(2004)
- CBD Technical Series No.77 Ecosystem Natural Capital Accounts: A Quick Start Package, CBD. 2014
- "Daang Matuwid - Achievements".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2016. 5. 27.)
- DESA, The World Social Report 2021: Reconsidering Rural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21)
- Dimitrios Diamantis(2010), The Concept of Ecotourism: Evolution and Trends, Current Issues in Tourism 2(2)
-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US), Climate Change, Future Conditions, and Nature-based Solutions: Webinar (July 28,

2021) ; Camilla Ghisleni (translated by Tarsila Duduch), 6 Urban Design Projects With Nature-Based Solutions

- Thomas Greiber,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IUC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 78)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September 2015)
-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2012 Central Framework, United Nations, p.iii. New York, 2014,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https://sdgs.un.org/goals>
- <https://www.archdaily.com>
- <https://www.korea.kr>
- <https://p4gpartnerships.org/about-us>
- <https://www.iucn.org/about>
- <https://www.iucn.org/about/iucn-a-brief-history>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080305>
-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590>
- <https://iucnuk.wordpress.com>
- <https://www.iucn-uk-peatlandprogramme.org>
- <http://vod.obs.co.kr/program/invi/invi-38.mp4>
- <https://www.iucn.org/theme/nature-based-solutions>
- https://ec.europa.eu/info/research-and-innovation/research-area/environment/nature-based-solutions_en
- <https://www.iucn.org/commissions/commission-ecosystem-management/our-work/nature-based-solutions>
- <https://www.iucn.org/theme/protected-areas/our-work/protected-area-solutions/panorama-solutions-a-healthy-planet>
- <https://www.iucn.org/theme/forests/our-work/slowing-global-deforestation-rate-and-primary-forests/slowing-global-deforestation-rate>
- <https://www.iucn.org/theme/marine-and-polar/our-work/climate-change-and-ocean>
- <https://www.iucn.org/theme/environmental-law>

- <https://www.iucn.org/regions/mexico-central-america-and-caribbean/climate-change>
- <http://www.fao.org/fao-stories/article>
- <https://www.cbd.int/cepa/cepa-fair/2018/presentations/cepa-fair-2018-giz-values-pub.pdf>
- <https://www.giz.de/en/worldwide/41607.html>
- <https://unosd.un.org/content/about>
-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What is natural capital?>
-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 Why does natural capital matter for economic growth? Isn't GDP enough?>
- <http://www.wavespartnership.org/en/frequently-asked-questions-natural-capital-accounting-nca: What are natural capital accounts? How are they different from the accounts that countries keep now?>
- <http://www.worldbank.org/en/topic/environment/brief/environmental-economics-natural-capital-accounting: context>

부록: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포럼 회의록

제1절 제1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 개 요

일 시	2021.03.03.(수)12:00~14:00	장소	서울 중구 달개비 R-11
작성자	진혜연 간사	작성	2021.03.03. (수)
참석자	IUCN 한국위원회: 윤종수 회장, 이우신 감사 환경부: 서혜인 사무관 국립공원공단: 김민선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진은숙 팀장, 현숙희 주무관 국제녹색포럼: 허경자 이사장 대자연: 김태선 부장, 최하진 간사 한국습지학회: 박영철 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김병중 팀장 사무국: 황은주 사무총장, 이희주 연구원, 진혜연 간사		
안 건	2021년 3월 IUCN 한국위원회 정기총회		

2. 회의내용

<p>황은주 사무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부 IUCN한국위원회 정기총회에 이어 제1차 IUCN한국위원회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윤종수회장님 말씀은 총회 개회사로 같음하고 이희주 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자한다. <p>이희주 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가들의 IUCN 위원회 사례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사무국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IUCN 본부와 특수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영국은 국가 내부적으로 자연보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 중이다. (발제 내용 중략) ■ 한국위원회의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고 목표를 위한 실행 계획 논의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전재경 이사:

- OECD 선도국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벌였던 아시아/아프리카 진출이 현재에는 자연보전과 관련하여 국제환경기구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제주도 리더스포럼과 관련해 한국 IUCN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IUCN 본부에서 바라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우신 감사:

- 동남아시아 국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기금 조성 및 코이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는 과정이 복잡하다.
- 북한의 경우 현재 생물다양성 전문가 그룹이 대거 정년퇴임을 한 상태이고 다음 세대 양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몽골과의 접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일본의 사례인 ‘청소년 습지보호 활동’을 활용하길 바란다.
- 우리나라 국립공원 수준이 높아 동남아시아와 연결해볼 수 있고 환경부 사업 중 특히 진보된 사업들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IUCN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 국가는 이미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재경 이사:

- 습지의 탄소 흡수량이 산림보다 뛰어나다고 알고 있다. REDD+ 적용도 가능할 것 같다. 개별 기관별로 의견을 모아서 다음 포럼 전에 회장님께 전달하겠다.

박영철 이사:

-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력은 기본이다. 사무국 차원에서 역할 해주기를 바라고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사업을 제안하여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 대자연의 경우 청소년 교육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의 OECD 국가 지정은 오래전에 되었으나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
- 국제적 협력 및 해외사업 진행에 있어 각 회원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 인력망 활용이 중요하다.

- FAO의 경우 ZOOM 회의를 통해 역할분담 후 사업을 진행한다.
- 한국 환경부에서 목소리를 내어 사업에 힘을 싣는 것이 한국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김민선 과장:

- 이희주 간사의 발표 잘 들었다. IUCN 한국위원회의 역할 및 목표 등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하다.
- 다양한 자연보전 지식생산을 통해 국내에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본부 자료의 번역서를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를 국내에 도입하는 역할을 생각해봤다.
- IUCN 한국위원회에서 회원기관들의 목소리 대변 역할도 중요하다. 각 회원기관의 강점들을 홍보하고 본부와 기관들의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내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므로 IUCN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구축과 뉴스레터 발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지난 IUCN 행사들 참여하면서 일본 국가위원회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정책 분석 및 미래세대 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부와의 소통도 탄탄하고 관련하여 IUCN 일본 홈페이지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김태선 부장:

- 각 회원단체들의 강점을 살려 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해본다. 각 분야의 학술적 내용도 발간하고 국가적 정책으로도 활용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 후 각종 정부기관, 공기업, 단체 등에 홍보로 이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허경자 이사장:

- 언급된 내용들에 동의한다. IUCN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해외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회원기관들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는지 단체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판 뉴딜이 국내에서 핫이슈이다. 장기간에 걸친 내용이라고 생각하

고 제주도 및 주변 도서지역에서 겪는 섬 쇠락문화의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다. 개발완화에 대한 관심 없이 생물다양성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은숙 팀장:

- 오늘 회의에서 한국위원회 결산보고를 듣고 예산 규모에 놀랐다.

서혜인 사무관:

- 탄소중립 등 현안에 발맞춰 생물다양성 홍보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폐회사>

윤종수 회장:

- 참여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 방법 및 자원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국민들과 회원기관의 회원들에게 IUCN 한국위원회의 국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 각 기관들의 세부적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에서 나눌 수 있으면 한다.

제2절 제2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 개 요

일 시	2021.03.23. (화) 10:00~12:00	장소	비대면 ZOOM 회의
작성자	진혜연 간사	작성	2021.03.23. (화)
참석자	IUCN 한국위원회: 윤종수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진은숙 팀장, 현숙희 주무관, 이승아 주무관 국립공원공단: 김민선 과장 대자연: 김옥현 이사, 임희련 간사, 최하진 간사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김수연 대리 한국습지학회: 박영철 이사 한국생태학회: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자문위원: 이응철 박사(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심숙경 박사(국립생태원 전시기획본부장) 사무국: 황은주 사무총장, 이희주 연구원, 진혜연 간사
안 건	2021년 3월 IUCN 한국위원회 제2차 활성화포럼

2. 회의내용

황은주 사무총장:

- 제2차 포럼은 IUCN 한국위원회 회원기관 활동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윤종수 회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다.

<개회사>

윤종수 회장:

- IUCN은 가장 큰 환경 NGO로, 60년 역사 가지고 있으나 IUCN 한국위원회의 활동 미비했던 것 사실이다. IUCN이 가지는 중요역할에 비해 활동이 미약했으나 환경부 협의·지원 하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 상반기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더불어 세계 회원간 네트워킹 강화, 긴밀한 협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아직 사무국과 운영인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현재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 이번 포럼 준비로 애쓰신 점 감사하고 자문위원분들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 IUCN WCC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금년 9월에 예정되어있다. 지역별 이사 후보자로 등록되었는데 지지 요청 활동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득표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회원기관들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득표권을 가진 단체들과의 교섭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는 사무국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다.
- IUCN 본부와의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포럼에서 IUCN 한국위원회 단기·중장기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황은주 사무총장:

- 이후 포럼은 전재경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주시겠다.

<발제 1. 한국습지학회>

전재경 이사:

- 오늘 포럼은 한국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겠고 참석하신 외부 전문가분들의 국제적 경험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습지학회 박영철 이사님께 첫 번째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철 이사:

- 한국습지학회(1998년) 주요활동 간략히 소개하겠고 가감없는 의견 주시길 바란다.
- 소식지, 학회지, 전문서적 발행, 심포지움, 국제워크숍, 정책포럼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환경부와의 R&D 프로젝트로 습지 탄소저장능력 평가·증진 프로젝트 제안 중이다. 내륙습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약 400억 원 규모이고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다.
- 모니터링 결과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태계 적응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갯벌 분야 정책 제안을 도출 할 예정이다.
- IUCN 한국위원회와의 공동사업으로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적응관리 지침서 개발 및 시범사업 (동남아 습지보전정책 지원을 위한 ODA 사업)을 제안드린다.
- 3개년 13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생태관리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할 기회라 생각된다.

전재경 이사:

- 토론 전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간단히 답변드리고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다.

윤종수 회장:

- 회원이 1,000명 넘는 것으로 보아 한국습지학회의 활발한 활동 면모가 드러났다. 탄소저장 능력을 평가·증진하는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Net-zero 시대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철 이사:

- 탄소중립이 국가적 이슈가 되어 환경부가 관심이 많고 여러 부처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제 계약을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 관련된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준비한 기획안이 기재부 심사 중이다.)
- 습지가 탄소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은 람사르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연안습지의 염분 때문에 탄소 저장능력 크다.

<발제 2. 한국생태학회>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 한국생태학회(1976년) 연혁 소개(2002년 세계생태학회, 2016년/2021년 동아시아생태학회[EAFES])
- 조직운영 측면 제언으로 현재 IUCN 한국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를 주축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므로 회원기관 참여가 저조하다. 총회는 연 1~2회 개최이기에 기관들의 활발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성 개선이 필요하다.
- IUCN 본부에서는 NGO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 공동사업 측면으로는 공동 연구과제보다 IUCN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도 우선이지만 만약 과제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유사업의 테마, 모션 등 파악이 필요하다.
- 관련 자료 배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역할을 IUCN 한국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외부 인력 활용하여 내용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IUCN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적극 장려할 필요 있다.
(예: EAGLs (국립공원공단)-보호구역 그린리스트, SSCs-IUCN 종보전위원회 등)

전재경 이사:

- 현재까지 질문사항 있으신지?

윤종수 회장:

- 조직운영 제언 자료에서 IUCN 본부 득표 시스템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

탁드린다. 발표해주신 부분은 한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 한국위원회의 역할 부재에 관한 내용이었고 취지는 회원기관의 참여 활성화이다.

전재경 박사:

- 종합토론으로 넘기기 전에 황은주 사무총장님이 이사회 구성을 함에 있어 고려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황은주 사무총장:

- 2009년 전임 회장 등기 이후 현재까지 임원 등기가 없었고, 2019년 12월 선출된 신임 회장 등기도 안 이루어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에 임시총회를 거쳐 신임 회장 추인을 받고 2020년 11월 23일 자 기준, 3주 내 회장 포함 변경 혹은 선출 이사 등기를 완료해야 함에 등기 이사가 다수일 경우 행정처리가 많아짐으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하고 등기이사는 최소 인원 선출로 작년 연말 행정처리가 시급하게 이뤄진 측면 있다.
- 각 정부기관 등은 당연직 이사 구성되어있다. 인수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여러 차례 정관개정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필요에 따라 개정작업이 이뤄졌는데 현재 단계에서의 이사진은 정관상 또 앞서의 이유 등으로 세팅되었으나 제안해주신 바처럼 향후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 아울러 참여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활성화 포럼의 취지인 만큼 포럼위 결과에 논의 되었던 의견을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이사진 구성에 여러 전제조건 있었음을 설명드렸다.

전재경 이사:

- 등기부 정비가 그간 미비하여 행정적 방치로 과태료 위기도 겪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상 오류가 있었던 명칭 수정과 등기부 등을 긴급하게 정비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종합토론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드린 것으로 판단된다.
- 시간 관계상 토론으로 넘어가겠다. IUCN 활성화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지만 UNESCO MAB 한국위원회의 경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가 되기도 한다.

- 적절한 징검다리로 심숙경박사(UNESCO MAB 국제이사 활동)를 모셨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IUCN 한국위원회 향후 전개 방향을 말씀해주시기를 청한다.

<자문위원 토론>

심숙경 박사:

- IUCN 위원회 중 하나인 WCPA(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중이다.
- 앞선 내용에서 개인 전문가의 참여가 국제적 기여를 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국가·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 IUCN 본부와와의 참여·협력을 위한 연결고리/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현재 개별기관 vs IUCN 경험들로 국한되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생각하고 한국위원회에서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 UNESCO 카테고리II 센터가 제주도다. (담당자: 진은숙 팀장)
- UNESCO 자연유산의 경우 IUCN이 심사를 하는 등 영향력 발휘하는데 IUCN 한국위원회가 역할 파악 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얼마 전 IUCN Youth Forum 워크숍 참가자 모집할 때 본인이 동남아 BR 주제로 한 청년팀의 멘토로 배정받았다. 한국팀은 없었던 점이 아쉽고 IUCN 한국위원회의 국가적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회원기관들의 조율 및 협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을 대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MAB의 경우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되고 있다. IUCN 한국위원회에서도 정기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자연생태보전 전문가들이 각종 자료와 동향 파악할 때 IUCN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다.
- 자연기반해법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번역한 관련 매뉴얼·보고서 등이 있고 국내 전문가에게 확산 되어질 필요가 있다.
- 역으로 우리 기관들의 사업들 또한 취합하여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pool 구축하는 것 또한 한국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재경 이사:

- IUCN 본부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뉴스레터 등에 실는 것이 필요하겠다.

최중기 교수:

- 두 분의 발표를 통해 좋은 의견과 바람직한 사례 잘 들었다. 전공분야인 해양학의 관점에서 느낀 점 공유하도록 하겠다.
- 해양학회의 경우 피드백의 부재, 소통문제 등으로 필요성에 의문이 들어 IUCN 회원을 중지했다.
- 해양수산부 민관정책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협의체 참여 단체들이 IUCN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고래 보호/보호지역 관련 (그린피스)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 해나가고 있다.
- IUCN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케이블카,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등) IUCN 원칙하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역할들이 IUCN 한국위원회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해양수산부 정책반영과 가입 권유가 필요하지 않나?

전재경 이사:

-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수부 관련해서는 윤종수 회장님께서 추후 보충 말씀 있으실 것 같다. 이응철 교수님 자문의견까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응철 박사:

- 박영철 박사님 발표내용 중 적응관리방안 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아쉬운 점은 생태계·자연보전에 인간활동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다. 보전한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중요한 생태자원들 존재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존재는 하나 발표에 포함이 안 된 건지 궁금하다.
- 한동욱 박사님 발표내용 중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일본 IUCN의 경우 1980년도에 설립되어 성숙한 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활동이 궁금하다.

전재경 이사:

- 다음 회차 포럼에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표가 예정돼있다. 상세내

용은 다음 포럼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으나 관련하여 말씀 있으시면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측에서 간략히 해주시길 바란다.

김수연 대리:

- 신안, 고창, 순천 등 갯벌 4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이다. 6월경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향후 포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심숙경 박사:

- UNESCO 세계유산의 경우 10가지 기준 중 경쟁력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생태적 분야로 분류한다. 갯벌의 특이점은 맨손어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인간 공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김민선 과장:

- 우선 한국습지학회와 한국생태학회 발표와 자문위원 의견을 잘 들었다. IUCN 한국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위해서는 IUCN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UCN에서는 사무국, 6개 위원회, 회원기관의 협업을 강조하는 조직이다. IUCN의 한국위원회 역할로 각각의 사무국들의 위치 및 현안사업, 6개 위원회 내부적인 다양한 테마사업을 정리하여 회원기관과 공유한다면 관련 회원기관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년 9월 WCC 모션에 관련해서 IUCN에서 4년마다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회원기관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재경 이사:

- 김민선 과장의 경우 방콕 아시아위원회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윤종수 회장:

- 그간 IUCN 한국위원회 역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다.
- 본부-회원기관의 연결 역할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잘 이뤄지는 IUCN 한국위원회가 되어야 하겠다.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으로 회원기관 상호

간 소통 필요하다.

- 자연보전분야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범식 과장, 김민선 과장의 IUCN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IUCN에 관한 발표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 이후 포럼에는 운영계획(참석자, 발표자, 포럼 주제 등)을 회원기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IUCN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2부 토론>

박영철 이사:

-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이전 회장단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응철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분야의 경우 생태학회(습지)에 부재해 아쉬움을 느꼈다. 교수님을 습지학회 이사로 초빙하여 해당 분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참여 관련해서 최교수님께 역할을 요청드리는데 어떤지. 교수님께서 역량이 있으시니 해수부 의향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환경부와 서로 담당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역할 분담 가능할 것이다.

황은주 사무총장:

- 오늘을 비롯한 차기 포럼들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IUCN 한국위원회 조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잘 엮어 ‘변화이론체계’(theory of change)의 틀로 제시하고 추후 홈페이지 구축 후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 공지사항 등 연락을 통하여 기관별 담당자들의 변동과 공백기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기관들과의 연결통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최교수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린피스 활동 등의 내용이 외부로 홍보되는 통로는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WCC 개최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구심점 부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 회원기관들께서 주선해 주셔서 네트워킹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월과 5월에 두 차례 더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회차는 잠정적으로 4월 13일(화) 14시 (ZOOM)으로 예정하되 이후 회원기관 참여가

능 일정을 더 확인하고 변동 사항 발생시 늦지 않게 연락드리겠다.

전재경 이사:

-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절 제3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 개 요

일 시	2021.04.13.(화) 14:00~16:00	장 소	비대면 ZOOM 회의
작성자	진혜연 간사	일자	2021.04.13. (화)
참석자	<p>IUCN 한국위원회: 윤종수 회장</p> <p>대자연: 김옥현 이사, 김재균 부회장, 김태선 부장, 임희련 간사, 최하진 간사</p> <p>국립공원공단: 윤홍근 과장</p> <p>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경오 사무국장, 김수연 대리</p> <p>한국습지학회: 박영철 이사</p> <p>자문위원: 이우신 교수(서울대학교), 심숙경 박사(前 국립생태원 전시기획본부장), 유범식 과장(환경부), 김민선 과장(국립공원공단)</p> <p>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p> <p>사무국: 황은주 사무총장, 이희주 간사, 진혜연 간사</p>		
안 건	IUCN 한국위원회 제3차 활성화포럼		

2. 회의내용

황은주 사무총장:

- 제3차 포럼 또한 IUCN 한국위원회 회원기관 간 협력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하는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회장님 개회사 이후 좌장을 맡아주신 전재경 박사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다.

<개회사>

윤종수 회장:

- IUCN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 유범식 과장이 오늘 참석하셨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IUCN 한국

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오늘 포럼이 회원기관 간 네트워킹,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자연보전 담당 기관으로서의 미션을 찾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
- Net-Zero, 탄소중립, 기후변화 시대 자연보전을 연계한 두 축으로 활동해야 한다.
- WWF의 경우 Earth Hour 등 대표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UCN 한국위원회에서도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기업과의 연계 및 점점 발굴이 필요하다 (예: ESG)
- 단·장기적 지향점을 명확히 세우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린다. 양해의 말씀으로 3시부터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 회의록으로 상세내용 확인하도록 하겠다.

황은주 사무총장:

- 시간이 지체되어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다.

전재경 이사:

- 오늘 발표자 2분, 토론자 4분 모셨다. 두 발표자분께 각 15분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 및 패널께서는 6~7분간 의견 공유 후 추후 보충 말씀은 종합토론에서 다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한국의 갯벌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단 문경오 사무국장 소개 드리겠다.

<발제 1.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경오 사무국장:

- 추진단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적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간단한 기관소개와 함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재추진 노력, 성과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 2014년 설립되었고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 이후 갯벌의 보존·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총 4개 사이트가 있고 연속유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갯벌의 47.7% 차지)
- 한국 갯벌의 경우 인간 활동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써 특이성을 지

난다.

- 3개 도서, 5개 시·군에 대한 통합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올해 7월 16~31일 위원회 개최 예정이고 우리 기관의 심사 관련 안건은 17~23일 사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역주민의 지지 및 성원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회 이상 주민들과 접촉하여 인식 증진 활동을 해왔다.
- 제안 과제로는 황해권 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중국과의 협의체 구성: 정부 & IUCN 한국위원회 & 유산통합관리기구)가 있고 북한과의 협력 증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1) 국내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역할, 2) IUCN 한국위원회 조직 확대(연회비 납부를 통한 사무실 운영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 마련, 기존 IUCN 본부 납부 회비 1/2 적절), 3) IUCN 본부회원 추천 요건을 심의할 수 있는 하향식 구조 플랫폼 구축이 있다.

전재경 박사:

- 문경오 사무국장 발표내용 중 기술자문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UNESCO biosphere reserve 한국위원회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UCN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 따라서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숙경 박사께서 추후 설명이 가능할 거라 생각된다.
- 우선 두 번째 발제 맡으신 대자연의 김재균 부회장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제 2. 대자연>

김재균 부회장:

-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기쁘다.
- 대자연 간략한 소개를 하겠다. 2009년 환경부 등록되어 전 세계 대학생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그린스쿨 시범학교, 그린캠퍼스, 그린월드를 운영하며 일반시민들과 sns를 통해 소통한다.
- 첫 번째 제안사항은 (이전 포럼에서도 언급되었던) 발전방향 제시 및 조직 체계 확립이다. 미션, 비전 확립하여 활동전략 수립해야 하며 운

영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술위원회, 청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구성하여 IUCN 한국위원회의 활동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

- 두 번째는 일반시민 대상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 전개이다. WWF와 같이 팬더, Earth Hour 등 인지도 높일 수 있는 활동들 모색해야 한다.
- 대자연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3가지로 1)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2) IUCN 아시아지역 청년포럼 운영, 3) IUCN 한국위원회 청년위원회 활성화가 있다.

전재경 이사:

- 두 발표자분 말씀 잘 들었다. 앞으로 IUCN 한국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지난번 포럼에서 IUCN 한국위원회를 본부의 6개 위원회 체계로 운영하자는 의견과 맥락이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아시아 국가권의 실질적 제안과 더불어 다른 국제기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차별성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안을 바탕으로 종합적 SWOT분석, BC분석이 필요하겠다.
- 재원 마련 방안 및 청년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 갯벌등재추진위원단 발표에서는 갯벌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고 황해권 협력체계 제시 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다.

<자문위원 토론>

이우신 교수:

- 갯벌 자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나그네새가 갯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호주의 연구팀이 새만금, 영종도 건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파괴 관련 내용을 다룬 바 있다.
- CBD 보호구역 확대 노력과 IUCN 한국위원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 IUCN의 경우 과학자 집단화가 이뤄지는데 각 기관 및 단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또한 언급되고 있는데 다초점 보다는 선택·집중하여 IUCN 한국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UCN은 GO 및 NGO가 다양하게 결속되어 있어 운영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있다.

유범식 과장:

- IUCN 본부 2년 반 근무기간 동안 IUCN이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갔다. 다양한 회원기관에 따른 성격이 모여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곳이며, NGO가 아닌 IGO 표방하는 기관이다.
-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기능을 하기도 하며 IUCN 사무국의 경우 UNDP와 같이 원조 예산 집행기구이기도 하다.
- 초기에 자연보전 분야를 선도하는 유일한 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동일 기능 가진 기관들이 생긴 상황이다.
- 환경부가 제주도와 같이 WCC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중요 framework partner로 합류했고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다.
- IUCN 최근 동향으로는 2019년 오벨리 사무총장이 UNEP에서 부임했고, 2021년 3월 중순 이성하 사무차장이 부임했다. 오벨리 사무총장은 스위스 환경청장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IUCN 크게 발전하는 시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IUCN 3대 사업으로 1) nature-based solutions(NBS), 2) 친환경 금융(코로나 시대 경기부양), 3) IUCN 아카데미가 있다.
- 사업 실행의 어려움 유발 요건으로 국내에 IUCN 인지도가 낮은 점과 예산 지원에 관한 focal point 발굴 한계라고 생각한다.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IUCN 한국위원회의 사업 발굴의 **장**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로 인해 환경부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 9월 마르세이유 ICUN 총회에 배정된 국가 파빌리온 운영 예산이 있다.
- 한중일 간 자연에 관한 교류가 저조한데 IUCN 한국위원회를 통해 협력 방안 및 체계를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중국 생물다양성 부서의 경우 현재 한국과의 접점이 미흡하다.)

전재경 이사:

- 고무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IUCN 한국위원회 방향 모색 중 오늘 발표에서 IUCN 아시아 차원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있었다. IUCN 태국사무소 근무경험 있으신 김민선 과장께 일부 이야기 들었으나 조금 더 보태주실 수 있으신지?

김민선 과장:

- IUCN 한국위원회 역할 3가지가 있다. 1) 한국 회원기관 통합 소통의 장 마련, 2) 6개 전문 위원회 참여 가능한 전문가 발굴, 3) 한국의 자연 보전 활동 홍보 및 본부의 정보를 한국에 보급
- IUCN 한국위원회 기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포럼이라고 생각하며 종료 이후 뉴스레터 및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노력 필요하다.
- 다른 국가위원회 및 아시아 지역 회원기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위원회의 경우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데 한국위원회가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면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 WCPA, 종보전, 환경법 등 본부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가 양성 제안한다. 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초빙하여 webinar 개최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 한국 활동 홍보와 본부 지식 도입 통로로써 IUCN 본부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파노라마(NBS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하며 연결통로 역할을 한국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자연 발표 중 청년 발굴에 대한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global youth summit과 같은 기존의 본부 플랫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회비 납부 관련해서는 본부와 한국위원회 동시에 이뤄지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다.

전재경 이사:

- 심숙경 박사가 활동하시는 UNESCO MAB이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화상회의를 보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오프라인, 그 외 국가들에서는 방송중계 형식으로 이뤄지는 모습 보고 감탄했다. 앵커들이 상당히 능숙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 지난번에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폭넓은 경험이 있는 심숙경 박사께 의견 공유 부탁드린다.

심숙경 박사:

- 오늘 언급된 좋은 제안들의 정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한국위원회의 기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계, 전략, 세부 목표 등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

- 한국위원회가 자연보전분야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다른 기관들의 강점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 한국위원회가 특성이 다른 여러 회원기관 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강점으로 내세워 논의, 동향, 지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성과들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 세계유산 관련해서 IUCN의 전문가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UNESCO MAB에서도 국내 전문가 pool을 운영 중에 있다.
- IUCN 본부에서 개별 단위로 세계유산 현장 전문가 실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위원회가 개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의 세계유산 전문가 pool 형성되어 있고, 자연유산 분야는 공백 상태이므로 한국위원회에서 이를 채우는 역할(자연유산 등재 후 보전, 관리, 교육, 홍보, 활용 등)을 할 수 있다. (예시: 제주도 용암동굴)
- 일종의 국제 동향(툰베리 등장)으로 여러 국제기관 들에서 청년들의 대변인 역할과 참여를 독려 중이다. 청년 포럼 및 위원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 가교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범식 과장께서 언급하신 신임 사무차장 소식 전해 들은 바 있는데, 환경 외 분야의 국제경력 많으신 분이고 초빙이 가능하다면 IUCN 한국위원회 연계방안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전재경 이사:

- 좋은 말씀 감사하다. 리더스보전포럼을 계획할 때 네트워크 활용 가능할 것이다. 토론 종합 정리를 하겠다. 1) 운영위원회 조직, 2) 전문위원회 조직, 3) IUCN Korea 특화, 4) 지적, 인적 등 교류역할 및 네트워킹, 5) 세계유산 심사 역할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중항행정기관으로서 협력관계 모색하는 가능성 열어두겠다), 6) 프로그램 계획 시 활성화 항목들 추가, 7) 청소년 참여독려 등 가능 등이다.
- 다른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종합토론>

박영철 이사:

-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위원회 전문가를 포럼으로 초청해 이야기 들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IUCN 한국위원회의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inner circle 진입하는 것 중요하다.

김옥현 이사:

-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기후변화, 생물보전 해결책 찾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생물다양성/기후변화 관계가 밀접해지므로 대응 및 연계가 필요하다.

전재경 이사:

- IUCN 한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참석자분들 중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좋겠다.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 파악을 위해 구글 설문을 진행하겠다.
- 회원기관 소통 및 사례, 조직 구성, 테마 구축 등 실질적 논의가 오갔다.
- IUCN NBS 및 생물다양성 부문에서의 연결고리를 찾고 환경부에서 문화재청과 논의하여 세계유산 등재 자연부문에 대한 심사 과정에 IUCN 한국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한다.

김재균 부회장:

- 논의된 내용의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예산 등 조직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경오 사무국장:

- 생물권보전부터 시작해서 세계유산 관여한 지 15년 되었다. IUCN 본부의 전체적 틀을 가져오는 건 어렵더라도 기본적 전략 및 실행계획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 발표에서 강조한 거버넌스 기능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본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책 결정에 이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등재 이후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심숙경 박사:

- 세계유산 관련해서 전문가 pool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의 경우 전문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재경 이사:

- 문화재위원회와 IUCN 한국위원회의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유범식 과장:

- IUCN 문화재 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정보 알아보겠다.

<폐회사>

윤종수 회장:

- 한국위원회 활성화에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IUCN의 최근 동향을 잘 알고 계시는 유범식과장님, 김민선과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시사하는 점 등을 전해주신 이우신교수님, 심숙경박사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회원기관의 활동 및 그를 통한 협력방안을 말씀해주신 발제기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을 잘 정리하겠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황은주 사무총장:

- 제3회차 포럼의 결과 등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골격 초안을 다시 다듬을 예정이다. 5월에 예정하는 마지막 제4회차 포럼 개최 건은 다음 주 중에 공지드리겠다.
- IUCN Korea 활성화(안) 마련에 오늘 유의미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자문위원, 회원기관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4절 제4차 활성화포럼 회의록

1. 개 요

일 시	2021.05.25. (화) 14:00~16:00	장 소	비대면 ZOOM 회의
작성자	진혜연 간사	작 성	2021.05.25. (화)
참석자	IUCN 한국위원회: 윤종수 회장		

	대자연: 김옥현 이사, 최하진 간사 국립공원공단: 김민선 과장, 윤홍근 과장, 서새별 계장 환경부: 서혜인 사무관 한국생태학회: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자문위원: 심숙경 부위원장(한국 MAB) 사무국: 황은주 사무총장, 이희주 간사, 진혜연 간사
안 건	2021년 5월 IUCN 한국위원회 제4차 활성화포럼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정책수요와 IUCN 한국위원회 회의 역할 등’

2. 회의내용

황은주 사무총장:

- 3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오늘 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마지막 포럼을 맞게 되었다. 관련 내용을 최종 자료로 엮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회장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다.

<개회사>

윤종수 회장:

- 3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럼까지 회원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 개인적으로 P4G 사전 녹화가 있었다. 생물다양성 특별 세션 패널로 참석했는데 발표하면서 NNT 사례와 자연총량제 도입을 시도하는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IUCN 한국위원회 활동이 그간 충분치 못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연보전 분야에 기여하는 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 또한 정부기관이 멤버로 참여하는 점이 강점이라 생각한다. 환경부에서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 관심 있기를 바란다.
- 회원국들의 주권 강화 및 여러 활동에 포럼 내용이 잘 정리되어 활성화 가능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를 바란다.
- 참석해주신 회원기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

황은주 사무총장:

- 회의 특성 상 토론은 그동안 우리 포럼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던 심숙경 박사님을 다시 모셨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

다.

- 오늘 포럼은 제1~3차 포럼 쟁점 정리 및 IUCN한국위원회의 기여방안에 대한 회원기관 합의가 주된 내용이다.
- 오늘도 전재경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다.

전재경 이사:

-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즉, 제4차 포럼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정리 및 그에 대한 의견 분석, 그리고 향후 IUCN 한국위원회 발전 방향, 추진방법 등에 대한 논의 마당이다.
- 오늘 사무국 이희주 연구원이 IUCN 한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안건들을 정리하여 그래픽화해서 토론으로 올리고자 준비하였다.
- 우선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되겠다.

<발제 1.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안)>

이희주 연구원:

- 그간의 포럼에서 조언해 주셨던 점들을 바탕으로 쟁점 키워드를 도출해냈고 추진 계획을 설정하였다. 발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토론>

전재경 이사:

- 사무국의 발표는 지식정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책 수요 개발 및 지원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다.
- 이전 포럼에서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주력 분야로는 생태계서비스 주류화, 탄소중립으로 집약했다.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대응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IUCN 한국위원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아우르는 생태계서비스를 내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으로서 탄소중립을 내건 것으로 이해가 된다.

심숙경 박사:

- 발표자료 그래픽에서 IUCN 한국위원회의 고유한 영역으로 3개 부문을 제시하였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연환경보전&지속가능한이용’이 조직의 목표로 설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 본부 홈페이지 미션에 보면 활동의 범주, 지향점이 나타난다. 사업의 영역 및 정체성이라는 큰 범위로 ‘자연환경’이라는 용어 쓰고 있다.
- 발표 자료에서는 ‘생물다양성’으로 조금 좁혀진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신 자연환경을 사용하는 건 어떤지? 대중의 이해와 각인 측면에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조직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도 유리하다.
- 2021 전략 목표로 언급된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탄소중립은 전략의 영역이 아닌지? 이런 부문에 한위가 집중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렸고 전략 목표라면 성취방법이 제시 되어야한다.
- 영역 선정에 있어서 IUCN의 포괄적 범위를 담았으면 한다. 전문적 정보 전달, 방향 제시 등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생태계서비스의 경우 사업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지만 좁혀진 개념이므로 한국위원회에서 생태 전반으로 넓은 용어를 쓰는 건 어떤지?
- 탄소중립 또한 국제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지만 그보다 IUCN 한국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및 잘 해낼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
- 생물다양성 분야가 소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생물들의 적응에 대한 목소리 더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 SWOT 분석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 연구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선 사업을 정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다. 포럼을 통해 일부 회원기관들이 국내외 공동연구, 시범사업, 학술 교류행사 등의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정기적인 소식지는 꼭 발행했으면 한다. 기관 및 단체 운영할 때 외부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활동을 정리한 역사가 되기도 한다. 동향 소개, 회원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로 축적되면 좋겠다.
- 기관의 존재감 측면에서 대중 참여사업, 청년 위원회, 청년 포럼을 운영하는 건 어떤지? IUCN 이름을 걸고 통합적으로 청년 전문가 양성

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전재경 이사:

- 말씀해주신 전략적 목표를 전략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과 포괄적 개념을 도입하는 의견으로 충분히 답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황은주 사무총장:

- 전달해주신 의견들 최종 보고서에 답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언급하신 SWOT 분석은 IUCN 한국위원회의 자리매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 우선 사업으로 대중 및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특히 우리 회원기관 중 대자연은 청년들과의 활동을 주로 해나가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다. 발족시킬 때 역량있는 기관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력을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구상해보면 좋겠다.
-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지원, 국제이사 선출 준비, 환경부 협력 등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다.

전재경 이사:

-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을 부각시키는 상황이라서 IUCN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부에서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의견과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김옥현 이사:

-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심숙경 박사께서 청년위원회 운영을 시범사업 일환으로 제시해주셨는데 대자연의 고문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 대자연에서 계획하고 싶은 사안이었는데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

전재경 이사:

- 대자연에서 청년위원회를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것은 어떤지? 추후 다시 논의 드리겠지만 회장님께서 승낙하시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듯

하다.

김옥현 이사:

- 운영위원회 신속하게 구성하여 전문가 pool을 구축하는 등의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실행으로 이어지면 한다.
- 시범사업 전개와 IUCN 총회에 필요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윤종수 회장:

- 29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는데 분과위원회에 청년이 포함된 것 같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계가 참여하게 보는 상황이다.
-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탄소 관련 중요한 일을 맡을 것 같다. 청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민선 과장:

- 그동안 개최된 포럼 내용의 공유 감사드린다.
- 발표에서 언급된 3가지 IUCN 기능(회원 교류, 국내외 교류, 홍보를 통한 이해증진)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 한국위원회의 기본 목적과 기능 설정에 있어 본부의 비전 및 미션과의 연계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단기, 중장기적 활동계획 개발에 지역적 차원의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동북아, 세계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좋을 것 같다.
- IUCN 본부의 6개 위원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주제를 참고하여 IUCN 한국위원회의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회원기관의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하므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들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다.
- IUCN 한국위원회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국내 위원회와 교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무소와의 사업연계도 구상해볼 수 있다.
- 뉴스레터, 홈페이지 운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가능한 플랫폼이고 홍보 역할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전재경 이사:

- 좋은 말씀 감사하다. 한동욱 박사님 의견 들어보고 싶다.

한동욱 박사:

- 비전, 미션, 전략적 목표 잘 정리된 것 같다.
- 생태학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교류라고 생각한다.
- 사업이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회원기관들로부터 어떻게 전문성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IUCN 한국위원회의 단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 운영방식이 되풀이 되어 참여의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획기적, 진보적 방식이 필요하다.
-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들도 있으나 특히 학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 단순 소통의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학회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해결책도 나오리라 생각한다.
- 또 다른 단기적 목표로는 회원기관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채널 개설이 있다.
- 개인적으로 과학(생물, 생태분야) 기반의 학회 및 기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가능케 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top-down 아닌 bottom-up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다.
- 국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네트워크의 경우 한국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생물다양성 기반의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학회의 전문적 활동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재경 이사:

- 말씀 감사하다. 듣고 보니 IUCN 한국위원회가 본부에 공인된 기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 기관이 있었다.
- 단체 간 소통 관련해서 문화재청이나 제주도 등 소원한 곳들과 회장단이 간담회 주선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 여쭙고 싶다.

윤종수 회장:

- IUCN 한국위원회는 IUCN 본부에서 인정한 공식 기구이다.

- IUCN 한국위원회가 그동안 긴밀하고 유기적인 활동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내부적으로 20개 기관이 어떻게 협조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대외적 역할을 정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 내부적으로 협력관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재정적 지원 부재 때문인가? 시도가 아예 없었나? 등에 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재경 이사:

- IUCN 본부 등록 비정부기구는 10개, 환경부는 별도 스폰서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4개를 포함 총 15개 기관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다.
-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윤종수 회장:

- IUCN 가입 회원기관이 충분한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 이번 포럼이 완료되면 논의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 포럼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인데 기본적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전파하기 위해 기관들과 교섭할 필요 있다.
-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회원기관들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황은주 사무총장:

-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통화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국위원회와의 소통이 미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원기관들이 그 상황에 적응한 느낌을 받았다.
- 이번에 사무국을 이전하면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 작은 성과들을 모아 신뢰를 쌓고 역량을 발휘하여 회원기관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윤종수 회장:

- 기관의 목표 및 기능 등이 중요하긴 하나, 단어 자체를 가지고 깊은 논의를 하기보다는 본부의 사업 방향 및 목적에 부합하면서 우리 자체의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단어의 개념 정의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나?
- 보고서에 좋은 의견들이 카테고리 별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것은 어렵겠으나 종합하여 유의미한 방향 제시하는 보고서 되리라 본다.
- IUCN 한국위원회 조직의 재검토 측면에서 사무국 형태나 회원 간 문제 등을 고려해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 브레인스토밍 필요하다. 기관 유지 요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해야 한다.
- 사업 카테고리로서 청년위원회,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 홈페이지 소식지 발행 활동의 우선순위 정하는 것 필요하다.
- 위에서 언급된 조직, 예산, 사업에 대한 사안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조직 외형 확장문제, 공동사업, 외부 협력사업 구상 등을 포럼 이후에 구체적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전재경 이사:

-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리에 큰 줄거리로서 가능할 것이다.
- 공공기관 가맹안에 대해 언급하신 적 있다.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한동욱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동욱 박사:

- 기관들 스스로 결정 내리기 힘들고 제도적 검토 필요할 것이다.

전재경 이사:

- 가맹기구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곧바로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심숙경 박사:

- IUCN 한국위원회의 영문 명칭이 고민된다. 영어로 단순히 Korea라고 명시하기보다는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는 것이 북한을 배려한

이름이다.

- IUCN 한국위원회가 남북한 자연보전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북한의 경우 IUCN이나 유네스코를 통해 자연생태 분야에 많은 참여를 해왔다. IUCN을 관련 사업자금의 통로 및 외부 협력 창구로 연결된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IUCN 본부에서도 관심 많은 사안이다.
-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IUCN ROK라는 명칭이 논의된 바 있는지 궁금하다.

전재경 이사:

- 좋은 말씀이다. 사무국에서 정리한 것을 보니 national committee 본부 리스트에는 Korea(RK) 라고 표기되어 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윤종수 회장:

- 좋은 의견이다. 북한에서 Korea 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 제기한 바 있고 이에 관련해 환경부 및 이사분들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보고서에도 언급되면 좋을 것이다.

전재경 이사:

- 사전 교섭 관련해서 기관장의 경우 윤종수 회장께서, 기관장이 아닌 경우 위임 받아 사무총장께서, 청년 대상으로는 김옥현 이사께서 차별화하여 소통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황은주 사무총장:

- 사무국에서 관련 사안을 추진하겠고 구글링을 통해 불참 기관들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재경 이사:

- 실무적인 논의 측면에서 서혜인 사무관 역할 기대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정책수요 개발 및 지원’ 부분이 이전에 환경부 유호 과장과 논의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국제기구들에서 발행하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들이 많은데 IUCN 한국위원회가 정부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이와 관련해 한국형 그린뉴딜, 녹색 복원, 생태계서비스 제도화 등 관련 자료를 가이드북으로 가공, 번역, 첨삭하여 관계기관들에 제시한다면 재정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서혜인 사무관:

- 번역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들과 매칭이 가능하다면 차별성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내년 용역사업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 되도록 전달하겠다.

김민선 과장:

- IUCN 한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3가지 의견을 드리겠다. 1) 보호지역 아카데미, 2) 청년포럼을 통한 청년 교육, 3) IUCN 인턴십/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기자단 활동이 가능하다.
- UNEP 한국위원회의 경우 ‘유넵엔젤’이라는 환경동아리 연합체가 활성화되어있다.

전재경 이사:

- 좋은 생각이다. 관련 사안은 심숙경 박사, 김옥현 이사와 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폐회사>

황은주 사무총장:

- 포럼을 통해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
- 초안이 완성되면 운영위에 올리겠다.

윤종수 회장:

- 돈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 참석 감사드리고 이번 용역을 가능하게 해준 환경부의 지원도 감사하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